



Division of Mind, Integration of Mind

Monday May 23, 2016 14:00-17:30 PM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Moderator

Lee Eun-Jeung, Freie Universität Berlin

Presentation

Memory of Spaces for Division and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Germany

Jean Yhee, Freie Universität Berlin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nd Between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Residents: Quantitative Analysis Focusing on Materialism and Individualism.

Yang Moon-S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rban Aspirations: (Post)Cold War Seoul-Berlin in Comparative Anthropology

Jin-heon Jung, Freie Universität Berlin

‘Workers’ State?’, Mind System of Working Class in North Korea

Yoon Cheol Ge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o Kab W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scussion

Hannes Mosler, Freie Universität Berlin

Eric Ballbach, Freie Universität Berlin

Cho Eunsung, Columbia University

Koo Kab W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Co-organised by

-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 SSK[Social Science Korea]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ponsor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분단과 통일의 문화적 기억

기억의 공간 그리고 분단 국가의 문화적 통일

이 진*

- I. 문화, 문화적 통일 그리고 분단과 통일의 문화적 기억
- II. 기억과 공간
- III. 이질적 기억에 대한 기록 기억의 포섭 능력. 독일통일과정의 문서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IV. 문화적 기억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독일미술논쟁을 중심으로
- V.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탈주민수용소, 수용소 기념관 및 탈주민의 신체. 독일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 기념관을 중심으로
- VI. 나가는 글

I. 문화, 문화적 통일 그리고 분단과 통일의 문화적 기억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통일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분단 시기의 이질적 기억들이 통일 전후의 독일에서 집단적 기억으로 공식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우선 문화와 문화적 통일, 그리고 분단의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는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서구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인간이 땅을 일구어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고 이를 수확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보다 더 풍요로운 뿐만 아니라 더욱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경작(cultus) 행위에서 문화(culture, Kultur)의 어원을 찾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경작지라는 물질적 토대에 노동 및 공동체의 조직과 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결합되었을 때, 단지 작물과 과실로 상징되는 물질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추상적인 가치 체계 역시 정립된다는 생각이 이 문화의 고전적 정의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가치 체계들 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이 인식된다.

*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선임연구원. 문화학 박사.

* DOI <http://dx.doi.org/10.17527/JASA.47.0.00>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된 문화는 특정한 가치들을 생산하고 규정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수정 및 폐기하는 제도들의 총체이다. 문화는 이와 같이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정하거나 새로운 조합으로 구성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립된 문화적 산물들을 안정적으로 소비하고 활용하는 관습으로서 경험된다. 가치 체계로서의 문화는 그 나름의 작동 방식에 따라 움직이기에, 여타 정치·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더 손쉽게 혹은 간접적으로 해결할 소위 윤택유로서의 역할만을 문화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미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 문화에서 단순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한 더 복합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문화에 대한 문화학적 접근은 기존의 질문을 단순한 답변으로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종교·경제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현 가치기 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토록 당연시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 우위를 놓고 경쟁하거나 혹은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가치체계들 간의 충돌은 그 가치체계의 작동 방식 자체에 대한 분석 없이는 결코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난제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가치체계들 간의 갈등은 분단되었던 민족 국가의 재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특수한 형태를 보인다. 분단 이전에 같은 민족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가정 때문에,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통일 이후의 문화도 소위 단일민족으로서의 가치 동일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두 겹의 규범적 전제가 암묵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문화적 통일이라는 용어에 담긴 이러한 규범성은 한반도 통일 담론에 있어 흔히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당연시되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설령 법이나 정치 및 경제 제도 등에 있어 일원화를 지향하는 좁은 의미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해도, 과연 문화 영역에서 이러한 원상회복적 동일화가 가능할 것인지 또 그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분단된 민족 국가 간의 문화적 통일이라는 용어는 단지 문화적 동일성 회복이라는 목표만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상이한 가치 체계들 간의 갈등을 동반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후술하듯이, 보존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려진 문화적 기억들은 개개인과 소속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기에 그 문화적 제도들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고찰은 인적 통합으로서의 통일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분단 기간이 장기로 지속되면서 각 국가의 주민들이 각 경계 내에서 고유한 역사

적 경험을 하고 그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도 상이한 공식적 해석을 접해왔던 경우, 분단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들은 통일 이후 미래의 경로에도 규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질적 기억들을 집단적 기억의 메커니즘을 도외시한 채 획일화하려는 것 보다는, 집단적 기억의 생태를 그 공식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나누고 그 각각의 문화적 제도 안에서 질적 표용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II. 기억과 공간

기억과 공간은 서로를 규정한다. 기억이 공간을 채움으로써 이를 다른 공간과 변별한다면, 공간은 기억을 담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희석시키거나 다른 기억과 합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낸다. 특히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모델 중에서, 민족이라는 집단적 기억을 만드는 작업이 근대 민족국가라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공간의 성립에 불가결했다고 설명하는 이론 모델은 비단 서구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근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수차례 적용된 바 있다.²⁾

그런데 민족국가의 분단 이후 재통일이라는 상황에서는 집단적 기억과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국가제도 간에 이와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된다. 하나의 민족국가가 분단 시기를 거쳐 다시 통일될 경우, 그 동안 둘로 파생되어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체계화되었던 서로 이질적인 집단적 기억들이 재통일된 하나의 국가 제도 안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쉽게 포섭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³⁾ 이 경우는 미리 정해진 [통일 국가라는] 기억의 공간이 만든 경계를, 사후적으로 도착한 [분단 시기 및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이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전체에 걸친 집단적 기억이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옳다면, 이러한 공동체의 형식적 경계와 집단적 기억간의 불일치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양자의 불일치가 단순히 기억 공간의 양적 크기를 확장 내지 연장시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집단적 기억

2) 이와 관련해 2002년에서 2006년 중 유럽연합국의 모토 ‘차이속의 통일’ („In Vielfalt geeint“)라는 목표에 문화학적 기억연구방법으로 접근한 국제적 학술프로젝트인 ACUME(Cultural Memory in European Countri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Fortunati; Lamberti (2008), in Erll (2008), p. 131 및 Yhee, Jean. Division and Circulation of Memories: On the Role of Documentat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from a Cultural Memory Studies Perspective, to be published at UC Berkeley in 2016 참조.

3) 민족국가의 분단과 통일과정에서는 민족국가 내의 간민족적 관계라는 측면 외에도, 기억과 정체성에 형성적 효력을 발휘하는 타민족국가와의 관계 및 탈민족국가적 층위를 고려해야 하지만, 전자의 특별한 측면을 논의하는 본 논문에서는 이를 특별히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이 서사적 성격을 지닌다고 했을 때, 그 주된 서사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기억이 과연 기억 용량의 증가로 포섭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서로 다르기에 때로는 상호 갈등하고 충돌하는 기억들을 그 이질적인 모습 그대로 기억의 공간 안에 포섭할 수 있을지를 질문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기억의 공간에 질적 포용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즉 어떠한 사회적 합의와 관용을 통해 이 공간에 더 세밀한 주름과 굴곡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질적 기억들의 생태를 어떠한 학문적 방법론으로 파악할 것인지를 질문이 던져지게 된다.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 두 가지 질문 중, 전자가 기억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로 이어진다면, 후자는 기억에 대한 인문학적 특히 문화학적 논의를 통해 다루어지게 된다. 어떠한 방법론을 택하는 경우일지라도, 공식적 통일과정에서 쉽게 포착되지 않을 사회적 갈등의 다면적 층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단과 통일의 기억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형식을 보이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에서는 주로 문화학적 기억연구의 관점에서 세 가지 사례, 즉 독일통일과정의 기록화 프로젝트, 독일통일 후의 미술논쟁의 의의, 그리고 특히 탈동독주민을 수용했던 서독의 긴급수용소라는 기억의 공간이 통독이후 어떻게 기념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써 분단과 통일 공간의 기억이라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문화학적 기억연구에서는 집단적 기억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적 기억의 생성과 변형 및 소멸에 관여하는 문화적 제도에 착안하는데, 상기한 세 가지 사례들 역시 분단과 통일의 기억이 각각 기록화 작업, 예술 창작 및 전시, 그리고 기념비나 역사 박물관 등의 역사 공간화라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적 제도를 통해 이질적이고 파편적인 사적 기억이라는 존재론적 지위에서 체계적이고 맥락화된 집단적 기억으로 전화(轉化)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III. 이질적 기억에 대한 기록 기억의 포섭 능력. 독일통일과정의 문서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문화적 기억의 형성과 공유 과정은 예를 들어 국가 공식 기념일을 위한 법제정과 같이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와는 달리 예를 들어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학술적 조사 및 기록문서화 작업과 같이 좁은 의미의 정치 행위 또는 일반 대중의 인식지평의 이면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정치적 의미가 줄어들지는 것은 아님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적 기억이 기록화(Archivierung)를 거쳐 집단적 기억으로 공식화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과정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정치·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역사에 대한 기록 자

체에 국가 간 분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기만 해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어떤 사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기록을 통해 저장되어 기존의 활성화 상태에서 다시 호출될 때까지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할 경우, 일정한 시계열 구간 중 특정 개념이 얼마나 자주 언론에 노출되었나를 조사하는 식의 통계적 접근으로는 이러한 전환 과정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그 존재론적이자 역동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파악되는 기억이라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접근, 특히 문화학적 기억연구의 방법론이 유의미한 결과를 줄 수 있다. 동 사례의 경우 문화적 기억의 형식을 활성화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억인 정전(正典, Kanon)과 문화적 기억으로는 남았지만 호출될 때까지 잠재태의 형식을 지니게 될 기록(Archiv)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알레이다 아스만의 문화학적 기억연구⁴⁾의 접근법을 적절하게 참고해 볼 수 있다.⁵⁾

보다 구체적으로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독일통일과정의 문서화 프로젝트⁶⁾의 의의와 성과가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독일과 한국 정부간에 독일 통일에 대한 ‘중립적인’ 기록의 이전이 왜 어려운지를 기록화 작업 자체에 수반되는 기억의 선별 및 배제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을 통해 설명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초기에는 독일 통일에 대한 일차적 문서 기록들을 확보해 한국 내의 독일 통일 관련 담론의 중심을 잡아줄 일종의 규준으로서의 정전을 확립하려는 목표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은 독일 통일에 대한 독일 정책당국자 및 기타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서도 각각의 과정에 대한 이질적 기억과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조금 더 융통성있게 수정되게 되었다. 독일 통일 및 통합 과정에 대한 법, 외교, 정치, 군사, 사법, 사회복지 및 노동, 가족,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실제 어떠한 논쟁을 거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에 의해 어떠한 조치가 각 연방주의 특색에 맞추어 내려졌으며, 그 정책적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공식적 기록의 확보가 여전히 중요했던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러한 통일 및 통합 과정에 대해 정책 당국자를 포함한 통일 독일의 동서독 출신 주민들이 다양하고도 서로 이질적인 기억을 갖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억에 혼합되어 있는 상이할 수 있는 사실 인식과 가치 판단이 통일된 사회정치적 공간에서 얼마만큼 자기 자리를 찾아 상호 소통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에서 수집되고 맥락화되는 ‘기록’은 사회적으로 통

4) A. Assmann, in: Erll (2008), p. 98.

5) 알레이다 아스만의 구분인 정전적 기억과 기록화된 기억간의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적 현실태(에네르게이아)와 잠재태(뒤나미스)로 해석하는 것은 논자의 관점이다. Yhee, Jean. *Division and Circulation of Memories: On the Role of Documentat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from a Cultural Memory Studies Perspective*, to be published at UC Berkeley in 2016.

6) <http://www.geschkult.fu-berlin.de/e/tongilbu/index.html>

용되는 활성화된 정전적(canonical) 기억과는 달리 기록이라는 문화적 제도의 특성 상 더 큰 이질적 기억의 포섭 능력이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달리 말하자면, 정전적 기억에는 선별을 통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서사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기억만이 선택된다는 특징이 있다면, 기록 기억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기억들이 저장될 수 있다는 차이가 경험적으로 인식되고 또 학적으로 성찰될 수 있었다. 즉, 기록 기억이라는 형식을 통해 독일 통일에 대한 이질적 기억들이 더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점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교조적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철학이 지배적 교육이념이었던 구동독지역 대학의 철학과가 통일 과정에서 인적·제도적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해 어떠한 정책결정과정이었는지를 기록하는 것만큼이나⁷⁾, 그 과정을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인사들이 어떻게 평가했고 현재까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할 때 큰 의미를 지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⁸⁾

또한 기록 기억을 독일에서 한반도로 이전하여 그로부터 정전적 기억을 수립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적 자기 재평가 속에서 두 종류의 문화적 기억 간의 동적 관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한반도 통일의 현실적 실현 이전에도 다양한 맥락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분단 및 통일 준비과정의 이질적인 기억들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기존에 이미 확립된 정전적 기억들과 기록 기억 간의 적극적인 순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에 더욱 이질적인 양상을 띄게 될 분단 기억들을 조화롭게 포섭할 수 있는 질적 포용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⁹⁾

이제까지 성립 내지 재통일 이후의 민족국가를 가장 큰 집단적 기억의 공간으로 파악하면서, 이 공간은 다시 정전적 기억이 통용되는 활성화된 담론 공간과 기록 기억으로 저장되어 잠재태로 존재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음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기억들의 분포는 구동독 출신인사의 기억 대(對) 구 서독출신 인사의 기억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할 수 없는 양상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통일 전 각 사회 내에서 세대와 사회적 배경, 소속 직업군과 인적 네트워크, 종교와 사상적 배경 등에 따라 이미 분단 상황을 그 안에서도 이질적으로 경험했었던 만큼, 분단에 대한 상이

7) Cf. Muszynski, Bernhard (Ed.) (1993), pp. 95- & pp. 273-; cf. Fuchs (1997), pp. 236-.

8) Yhee, Jean. Division and Circulation of Memories: On the Role of Documentat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from a Cultural Memory Studies Perspective, to be published at UC Berkeley in 2016.

9) Ibid.

한 기억들에 대한 사회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이 통일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기억의 형성에, 그리고 공식적 통일의 완료 이후에도 각 개인적 삶의 포물선에 그리고 정당구조를 포함한 사회적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¹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IV. 문화적 기억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독일미술논쟁을 중심으로

바로 이 측면이 통독 후의 독일미술논쟁(der Deutsche Bilderstreit)에서 특별하게 부각되는데, 즉 동 논쟁에서는 통일에 수반된 입장과 기억들 간의 경계 내지 전선이 구동독과 서독의 이분법으로 나눌 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특히 잘 표현되었다.

최근 국내에도 소개된 레베르크 교수의 논문¹¹⁾은 이와 같은 독일미술논쟁의 다층적 담론구조를 문화사회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중요한 결과물이다. 동 연구에서는 사적 기억의 매개체로 작동하는 미술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 보다는, 집단적 기억을 담지하는 문화적 제도로서의 미술 작품들의 전시 및 그를 둘러싼 담론의 분석이 그 주된 연구 대상이다. 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에서 통일 이후 ‘구 동독에서 만들어진 예술작품, 특히 미술작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존하고 전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본 논쟁은 애초의 물음에서 멈추지 않고 긴 분단시기를 겪은 민족국가가 다시 통일 되었을 때 불거질 양상들의 넓은 스펙트럼을 선제적으로 보여주었다. “동독에 화가라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튜케(Werner Tubke), 하이지히(Bernhard Heisig) 그리고 마토이어 (Wolfgang Mattheuer) 같은 대표적 동독 작가들 중] 누구도 한번이라도 [미술작품이라고 불릴 만한 진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화가가 아니라 그냥 나쁜 놈들(Aschenlocher)일 뿐이죠.”(Ibid, p. 324)라는 말로 동독에서의 미술 창작 일반을 평가절하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인 이는 서독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분단 시기 중 구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던 미술가인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였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상징적이다.

통독 이후 시점에 수차례 이루어진 구 동독 미술작품 전시에 대한 논의 속에서 분단보다 더 오래된 나치 퇴폐미술 전시회의 기억이 호출되고 서로 혼합되는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구동독 미술전시회의 관람객 들은 작품들 자체에서 동독에서의 삶에 대한 때로는 체제우호적인, 때로는 반체제적이거나 혹은 비정치적인 태도를 읽어내려는 데 관심을 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통일 독일에서 큐레이터가 구동독의 기억을 담고 있는 미술

10) Korsch (2016), in: Häusler (2016), pp. 112-125.

11) 레베르크; 이진 편역, <미술논쟁의 이름으로 벌어진 사회담론의 대리전쟁: 통일 후 전개된 독일 내의 미술논쟁의 역사와 기능에 관해 (2-1)> in: 한국미학예술학회, <미학 예술학 연구> 45권0호 (2015), pp. 323-358.

작품을 어떻게 전시라는 형식으로 다루고 취급하는지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Ibid, p. 341-347). 최소한 표면적 혹은 공식적으로는 동독이 부정했던 나치즘과 동독 체제가 통독 이후 몇 개의 중요한 미술 전시 기획에서 하나의 맥락 속에서 연결되는 듯한 모습에 일반 미술 애호가 뿐만 아니라, 미술에 큰 관심이 없던 구 동독 주민들도 격렬한 반감을 보였다.

독일미술논쟁 중의 주요한 사건이었던 1999년 바이마르의 동독 미술 전시에서 동독 통일사회주의당(SED)의 후신인 PDS 당이 “미술은 우리의 [...] 기억” (“Kunst ist unser [...] Gedächtnis“)¹²⁾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술이 우리의 기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더욱 상징적이었다. 실로 문학과 같은 언어예술 뿐만 아니라 미술 및 기타 공연예술을 통해서도 집단적 기억이 저장되고 순환되며, 한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상호 구성적 관계를 맺는다. 미술의 경우 미술작품의 창작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는데, 미적 형상화 과정을 통해 작품에 저장된 기억은 전시자의 개입을 통해 특정 문맥이 새겨지게 되면서 집단적 기억의 대상으로 다시 호출된다.¹³⁾ 작품의 창작 뿐만 아니라 그 전시 및 관련 논쟁에서 다양한 기억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형식적·법적·제도적 통일만으로는 하나로 수렴되지 못한 내적이자 문화적 이질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레베르크 교수의 연구에서 독일미술논쟁이 독일 통일의 제 분야에 미봉합된 갈등들을 대신 표현했다는 의미에서 단지 미술에 국한된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대리논쟁 (“stellvertretender Gesellschaftsdiskurs“¹⁴⁾)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침언하자면, 이 용어는 사회 제 분야에 있어 불거진 통일의 갈등이 미술논쟁에 대신 표현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를 미술논쟁을 통해 마침내 기존의 통일 과정에 대한 불만과 몰이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표명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이미 배태하고 있었던 타 분야에서의 진정한 상호이해 가능성도 함께 열리게 되었다는 해석도 역시 가능하다. 이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자면, 독일 미술논쟁은 단순히 통일의 내적 분열상을 노출시킨 부정적인 현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초기 통일과정에서 공적 제도를 통해 표출되고 대변되지 못했던¹⁵⁾ 동서 분단의 이분법을 넘는 다양한 입장과 기억들이 자신이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미술 전시 및 그에 대한 논쟁이라는 문화 제도를 통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서로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갈등을 생산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던 새로운 기억의

12) Rehberg (2013), p. 37, 우하단 사진.

13) Cf. A. Assmann (2010), pp. 218-.

14) Ibid, p. 23

15) 통일 이후 분단 당시의 구동독에 대한 이질적인 기억들 간의 충돌에 대해서는 A. Assmann (2013), pp. 109- 참조.

공간이 점차적으로 생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V.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탈주민수용소, 수용소 기념관 및 탈주민의 신체. 독일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 기념관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분단 및 통일 과정 기억의 기록화, 그리고 미술 전시라는 문화제도 속에서 분단과 통일 이후의 내적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문화학적 기억연구의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두 사례는 모두 통일에 있어 기억의 중요성, 즉 분단 시기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 대한 기억 공유가 이후 내적·문화적 통일이 달성되기 위해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질적 기억들이 발화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화하고 조정할 것인가의 과제가 새롭게 주어질 것임을 예시하였다.

그런데 한 사회의 문화적 기억은 기록화 작업 및 예술적 형상화 속에서 보존되고 재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신체에 새겨지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혹은 몸(corpus)은 데카르트적 연장(extensio)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억들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만일 개인들이 통일 이전에 국가 간의 경계를 넘게 될 경우 그 각각의 신체에 각인되었던 기억들은 도착한 새로운 공간에서 같은 분단 시기에 대한 이질적인 기억들과 마주쳐야 한다. 국경을 넘은 이후에도 그 경계를 스스로 그리고 타인에 의해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경을 넘은 순간(Grenzübergang) 이후에도 계속 경계인(Grenzgänger)로 남게 되곤 한다. 이들 경계인으로서의 탈주민 들은, 자신의 몸 안에서 다른 공간에서 형성되었던 이질적인 '나'에 대한 기억들이 다층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경험한다.¹⁶⁾ 또한 그들을 이제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비경계인으로서의 일상인 역시 추상적으로만 이해했던 경계의 실재를 체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억의 공간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인과 함께 이동하고, 다른 기억의 공간과 충돌하거나 교차한다. 이 기억들 사이의 마주침을 추적함으로써 탈경계인으로서 통일 이전의 탈주민들이 국경 너머의 삶의 공간에 어떻게 도착하고 받아들여지는지의 메커니즘을 독일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 기념관(Erinnerungsstätte Notaufnahmelager Marienfelde)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부 밝혀보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6) Cf. Nietzsche, ZA, Vorrede, KSA 4, S. 19.



그림 1: 베를린 장벽이 들어선 1961년 8월 13일 바로 다음날인 8월 14일의 난민행렬. (사진출처: 마리엔펠 데 탈동독난민 긴급수용소)

2015년 12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약 3만명에 달한다. 그중 여성 비율은 2000년대 초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약 전체의 약 80퍼센트를 구성하는데, 2015년의 경우 남녀를 합쳐 총 1,276명의 주민이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도착하였다. 제3국이 아닌 한국으로 올 것을 선택한 이들은 한국 도착 후 현행법에 따라 하나원으로 통칭되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결정 이후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¹⁷⁾

1990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의 분단된 독일에서도 이에 비견될 만한 탈주민에 대한 교육 및 수용시설이 서독 그리고 동독 양측에 모두 존재했다. 탈북주민의 경우에서도 그러하듯이, 분단 시기 독일에서 이들의 존재는 통일 이전에 미래의 통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게 될지 일정 부분 미리 경험하게 해준 중요한 계기였다. 통일 전 기간 중 서독에서는 대규모로 탈동독주민이 이주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하고 다른 사회 및 경제 체제에 적응하도록 교육할 시설들이 서베를린을 시작으로 건설되었다. 본 논문에서 특히 살펴볼게 될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1953년에 서베를린 남부에 설립되어 주로 조사 및 수용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¹⁸⁾

여기서 잠시 대규모라는 말로 표현한 탈동독주민의 수를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이러한 시기적 구분이 필요한 것은 베를린 장벽이 건설된 1961년 전후로 동·서독간 민간인의 자국 이탈가능성에 큰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먼저 패전 후 통일 전까지의 전 기간, 즉 1945년에서 90년까지를 보면 약 5백만명 (496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1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2015년 9월.

18)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영구 이주 내지 탈주를 감행했다.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로 이전보다 탈주가 위험하고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수치에 반영이 되어 동년부터 헝가리-오스트리아간 국경이 개방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의 시기 중에는 연간 탈주자 수가 그 이전보다 감소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기간 중 약 125만명에 달하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인원이 서독으로 넘어왔다. 1989년 당시 동독 전체 인구가 약 1,700만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규모가 동독 그리고 도착지인 서독에 대해 갖는 파급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존재했던 후자의 기간 중 동독을 이룬바 '불법적으로' 이탈해 서독에 갔던 경우에 해당하는 인원은 125만명 중 약 30만명인데 여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장벽이 들어서기 직전까지와 무너진 직후의 기간에 서독으로 넘어간 경우가 각각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점, 또 그 외에도 출국허가(Ausreiseantrag)를 받고 공식적으로 동독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경우, 또 정치범으로서 서독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데려온 경우(Freikauf) 및 동독 연금생활자로서 합법적으로 서독에 이주한 경우 등이 동 기간 총계인 125만명에 모두 포함된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이 국내에 어느 정도 잘 알려졌다고는 하나 총 500만명 혹은 베를린 장벽이 존재했던 기간 중의 125만명이라는 수치는 어쩌면 일반적인 예상보다 많은 인원일 수 있겠다.¹⁹⁾

약 5백만명의 동독주민이 공식적 통일 이전 분단 시기 중 이미 서독으로 이주했으며, 이 대규모 이주 상황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주의 국가인 독일의 특색 상 각 지방정부 및 중소 지방자치단체까지 전국으로 분산된 동독이탈주민의 통합을 위한 장·단기적 과제들을 수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동·서독간의 이주 및 이탈현상과 문화적 교류가 분단 기간 상호에 대한 어떠한 기억을 형성하고 또 통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통일 논의와 관련해 독일 통일 과정을 검토할 때 지금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독일도 통일 전 긴 분단 시기를 거쳤지만 동독 이탈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된 더 많은 수의 서독 주민들은 공적 그리고 사적영역에서 통일 전의 내적 통일을 먼저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 그리고 1990년 신연방주들의 독일연방 가입을 통한 통일 이후의 과정에 이러한 과거의 기억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그보다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분단시기 지역사회로 통합되기 이전 탈동독 주민이 최초로 수용되고 교육받았던 긴급수용소가 공식적 통일 이후 25년이 더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의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당

19) Effner & Heidemeyer (2013), p. 11,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20) Brecht (2013),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시 긴급수용소의 기억이 현재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냉전체제 하의 분단의 기억이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맥락에서 재평가되고 재구성되어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가?

앞서 언급했듯이 동서독 간의 대규모 주민이탈 및 이동현상이 존재했는데, 이는 당시 양 진영에서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타 체제를 비난할 근거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각 주민들이 이주를 결행하게 했던 동기에 정치적 동기가 존재했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족, 친척 혹은 애인과의 재결합과 같은 개인사적 동기 혹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찾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 등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²¹⁾ 하지만 냉전 상황 하에서 정치적 진영논리의 서사에 부합하지 않았던 이상의 다양·다기했던 이탈의 동기들 그리고 이탈주민의 떠나게 된 '고향'²²⁾과 지인들에 대한 종종 긍정적이었던 개인적 기억들은 공식적인 집단적 기억으로 포섭되지 않고 상당부분 사상되었다.

진영논리의 서사에 부합하는 식으로 단순화되고 공적 역사로 변형되었던 각각의 사적 기억들에 그 원래의 다원적 이질성을 통일 과정 중에서 사후적으로 복원한다는 과제는, 과거와 현재 간의 절대적인 시간적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라 현재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이미 정형화된 정전적(canonical) 기억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어렵고도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통일이 달성되어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 그 과제는 실질적이지자 평화적이며 항구적인 통일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²³⁾ 이러한 이유에서 탈동독주민이 긴급 수용되었던 공간이 현재 어떻게 기념의 대상으로서 사회적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앞으로 이 지난하고도 불가결한 과제를 푸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를 거쳐간 탈동독주민의 인원만도 1953년

21) Bispinck (2013),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22) 알레이다 아스만은 세대적 장소(Generationsorte)에 대한 기억 형식과 추모 장소(Gedenkort)에 대한 기억 형식 간의 차이를 지적한다. 한 장소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공간에 기억들이 축적되게 되는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장소에서 과거와 현재가 많은 경우 폭력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것이 추모 장소의 기억 형식을 규정한다. (A. Assmann,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p. 309) 세대적 장소를 고향을 강제 혹은 반강제로 떠나 타지에 정착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현재도 난민을 위한 긴급수용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의 경우는 또 다른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23)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수용소 설립 이후 통일이 된 1990년까지 총 140만명에 달했기에, (Effner u. Heidemeyer, p. 11) 그만큼 분단과 통일에 역사적 의미를 지닌 이 장소를 통일 이후에도 기억의 공간으로서 남기기 위해 통일 직후인 1993년 같은 장소에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특기할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기념관의 설립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과거 동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구 탈동독주민들 및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학계 인사 등이 모여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인 방식으로 기념관 설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연방의회에서 토론 끝에 공공기관에 준해 국가적 인정과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8년이 었다.²⁴⁾ 이러한 시민사회로부터의, 무엇보다 기념되는 과거 기억의 주체였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발상에 의해 설립이 이루어졌던 배경을 보면서 어떻게 동 기념관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역사기념관이 빠지기 쉬운 함정, 즉 역사 및 집단적 기억에 대한 단 하나의 공식적 서사가 지배하는 식의 전시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된다.

동 기념관은 단순히 당시 탈동독주민들이 이곳에 어떻게 수용되었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서독 사회로 나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주민이탈 및 이주 현상이 냉전 구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이용되었는지를 현재 시점에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동독 탈주의 동기들에 대해 일반적인 통념처럼 단지 통계수치 등을 인용하며 일반적인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독을 떠나 서독에 도착했던 시기와 그 후 서독 정착 이후, 특히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던 시점 각각에 이루어진 독일인의 인터뷰를 관람자가 직접 보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다양한 인터뷰에서 관람자는 분단 전 탈동독주민에 대한 서독 당국의 시선 못지않게, 도착한 서독에 대한 당시 탈동독주민의 시선도 간접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들은 서독에 도착할 때의 안도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아니라 당시 거쳐야 했던 심문과정에 대한 생경함과 동독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 부딪혔을 때의 당혹스러움을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²⁵⁾

이질적 기억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만든 자발적 역사 기념관의 포용력을 다시 확인하게끔 하는 또 다른 모습은, 이 서독 소재 탈동독주민 수용소에 대한 기념관에서 그 반대로 동독으로 갔던 탈서독주민들의 사례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는 점이다.²⁶⁾ 앞서 대규모로 발생했던 탈동독난민의 총 인원수보다 어찌면 더 놀라울 수도 있는 통계치인데, 1945년에서 90년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인원이 약 6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동 전시에서는 굳이 감추지 않는다. 이 중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탈했다가 이후 여러 가지 상황 및 이유로 다시 동독으로 되돌아 간 인원은 약 40만명인데, 이들은 앞서 언급한 동독에서 서독으로 향했던 분단

24)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25) Kimmel (2013),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26) Röhlke (2013),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전체 시기의 약 5백만 명 그리고 1961년과 89년 사이의 125만명이라는 추산치에 모두 중복 계산되어 있다.²⁷⁾

동 기념관에서 엿보이는 서사로서 혹은 관점으로 이질적으로 존재하던 분단과 통일의 기억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일관적이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그리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각각의 긴급수용소를 거쳐 간 주민들에 대해 당시 두 정부와 언론의 보도 선전들이 나란히 소개되어 있는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주했다가 일부 다시 동독으로 복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서독에 남게 되는데, 이들이 서독에서의 새로운 삶에 매우 불만족하고 있다는 당시 동독의 보도에 대한 전시물 바로 옆에는, 이 보도 직후 동독 방송에서 언급되었던 주민들을 한 명씩 방문 인터뷰하면서 그러한 주장의 허구를 주장했던 당시 서독의 공영 방송보도가 상영되고 있다. 관람자는 그러한 냉전적 서사가 양 체제 간에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공식적인 서사로 모두 포섭되지 않았던 동독에서의 주민들의 일상에 존재했던 억압적 기제들과 그를 피해 어떻게 동독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한 기억들도 공유하게 된다.

2층 전시공간에 올라서면 당시 긴급수용소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역사 기념관이 기념과 기억의 대상을 수용소의 과거에 한정하지 않고 기억이 계속 중첩되고 있기에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곳에서는 1990년 이전에 먼저 서독 사회로 도착했던 탈동독주민의 기억 뿐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1990년 통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동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비독일권 출신 난민들의 기억이 계속 중첩되고 있다. 그를 통해 던져진, 난민의 이주 및 문화간의 충돌과 통합이라는 화두를 놓고 관람자는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얻는다. 관람자는 수동적인 입장을 넘어 이와 같이 서로 경쟁하는 가치와 정체성들이 어떻게 형식적인 단순 병치가 아니라 다원성을 유지한 채 서로 소통하면서 ‘통일’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때의 차이를 사상하지 않는 통일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찰하게 된다.²⁸⁾

27) Effner & Heidemeyer (2013), in: Effner & Heidemeyer (Ed.) (2013).

28)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그림 2: 이주 시기와 출신 배경에 있어 이질적인 당시 수용자들의 기억을 콜라주 식으로 병치시킨 모습이다. 오른쪽 벽면에는 1973년 동독 출신 수용자의 당시 기억이 붙게, 왼쪽 벽면에 2011년 수용되었던 이란 출신 난민의 기억이 푸르게 표시되었다

이와 같이 이질적 기억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기에 동 역사기념관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독일국민들의 동·서독간 이주문제에 대한 전시물 옆에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대규모로 이주하던 6-70년대 당시 서독 상황에 대한 해설이 콜라주식으로 연결되는 전시 방식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특정 기억의 공간이 형성되었던 과거 당시의 관점과 지평에 강박적으로 묶여있지 않을 때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상도 이민 및 이주사회(Migrationsgesellschaft)에 대한 기억²⁹⁾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함께 성찰해야 할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두 현상 간에 가능했을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파악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현재 독일에서 실제로는 외국 이민자의 주거비용이 여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 드레스덴 등 일부 구 동독지역이 오히려 반이민자 정서가 팽배하고 폐기다(Pegida)와 같은 반이민자/반이슬람 시위의 중심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동 현상에 대한 정치·문화·사회학적 분석³⁰⁾에서 그 원인의 하나로 통일 전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교육과 일상적 경험에 있어 동서독간의 차이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¹⁾ 베를린 자유대의 정치학자 아슈어 교수의 분석에 따를 때도 절대적인 비교에서나 인구 가중치를 고려한 상대적인 비교에 있어서나 공식적 통일 이전에도 예를 들어

29) A. Assmann (2013), pp. 123-.

30) Cf. Çakir (2016), in: Häusler (2016), pp. 149-162.

31) Cf. 본 학술대회 발표 중 Rehberg 논문.

1973년에 260만명에 달했던 소위 초청노동자(Gastarbeiter: 이주노동자)와 어떻게 함께 살아 가야 할지에 대해 긴 기간에 걸쳐 사회문화적 갈등에 맞닥드렸던 구서독지역은 구동독지역에 비해 현재 확연히 낮은 반이민자 정서를 보인다.³²⁾ 일견 무관해보일 수 있는 다문화 문제와 통일 문제가 왜 문화적 통일이라는 개념을 통해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분단에 대한 이질적 기억들의 전시 공간을 통해 장려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주한 탈북주민들은 현행법 상 탈북자 조사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 중앙합동신문센터)를 거친 후, 하나원으로 통칭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3개월간 수용되어 사회체제 및 직업적응교육을 받은 후에야 하나원 밖의 남한 사회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다. 탈북주민이 기본적 신원조사 이후에는 동 긴급수용소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서독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만큼 분단과 통합 기억의 공간으로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침 2016년 2월 24일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본원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시관'이 개관하였는데, 이를 한 계기로 공식적인 통일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분단과 통합의 기억을 포섭할 수 있는 문화적 제도로서의 기억의 공간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사회적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나가는 글

상이한 배경을 가진 집단들 간에 또 그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에도 서로 이질적일 수 있는 분단 및 미래 통일 과정에 대한 기억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기술적(記述的)인 성질이 아니라, 흔히 가치 평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상이한 가치체계들이 반영된 기억들을 포섭하고 분열적 갈등을 창조적 갈등으로 승화시킬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문화적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문화적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통해 던져지는 질문이다.

한반도의 문화적 통일이라는 과제는 한편으로 사회구조의 다문화적 변화에 대한 고려를 요청한다. 즉, 우리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주민 외에도, 2015년 현재 약 70만명을 넘어선 중국동포를 포함해서, 2013년말 현재 대한민국체류 외국인이 150만명(1,576,034명)에 이른다는 점³³⁾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³⁴⁾ 그와 동시에 이 과제는 남·북한의 주민들이 한국 전쟁은 물론이고, 그 이후 공고화된 분단 체제에서 각자 경험했던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 예를 들어 남한의 광주민주화운동이나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 중의 기아 사태와 같은 - 에

32)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3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4)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대한 기억들을 어떻게 서로 공유하고 또 그에 대해 관용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의 질문도 수반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기억연구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도달한, 이질적 기억간의 생산적 갈등이 가능한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문화적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가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있어 갈등이 갖는 의의에 대한 별도의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³⁵⁾

참고문헌

이진, <통일 전의 통일. 공간의 이질적 기억에 대한 문화학적 소고>, LH Insight Nr. 21, 2015.

이진 (Yhee, Jean), *Normative Spielregeln für Produktive Konflikte - Multikulturalität und das agonale Verhältnis der Kulturen*, 니체연구 29집, 2016

레베르크, 카를-지크베르트; 이진 편역, <미술논쟁의 이름으로 벌어진 사회담론의 대리전쟁: 통일 후 전개된 독일 내의 미술논쟁의 역사와 기능에 관해 (2-1)> in: 한국미학예술학회, <미학 예술학 연구> 45권0호 (2015), pp.323-35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2015년 9월

Assmann, Aleida.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C. H. Beck, 2010.

Assmann, Aleida. *Das neue Unbehagen an der Erinnerungskultur. Eine Intervention*. C. H. Beck, 2013.

Effner, Bettina & Heidemeyer, Helge (ed.). *Flucht im geteilten Deutschland*, be.bra verlag, 2005:

Bispinck, Henrik. *Motive für Flucht und Ausreise aus der DDR*. in: *ibid.*, pp. 49-65

Brecht, Christine. *Integration in der Bundesrepublik: Der schwierige Neuanfang*, in: *ibid.*, pp. 83-95

Effner, Bettina & Heidemeyer, Helge. *Flucht im geteilten Deutschland*, in: *ibid.*,

35) 이와 관련하여 Yhee, Jean, *Normative Spielregeln für Produktive Konflikte - Multikulturalität und das agonale Verhältnis der Kulturen* 참고.

pp. 11-25

Effner, Bettina & Heidemeyer, Helge. *Die Flucht in Zahlen*, in: *ibid.*, pp. 27-31

Kimmel, Elke. *Das Notaufnahmeverfahren*, in: *ibid.*, pp. 115-133

Röhlke, Cornelia, *Entscheidung für den Osten. Die West-Ost-Migration*

Erll, Astrid and Nünning, Ansgar (Ed.).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Walter de Gruyter, Berlin / New York, 2008:

Assmann, Aleida. *Canon and Archive*, in: *ibid.*, pp. 97-108.

Fortunati, Vita; Lamberti, Elena. *Cultural Memory: A European Perspective*, in: *ibid.*, pp. 127-137.

Fuchs, Hans-Werner. *Bildung und Wissenschaft seit der Wende. Zur Transformation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1997.

Häusler, Alexander (Ed.). *Die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Programmatik, Entwicklung und politische Verortung*,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2016:

Çakir, Naime. *PEGIDA: Islamfeindlichkeit aus der Mitte der Gesellschaft*, in: *ibid.*, pp. 149-162.

Korsch, Felix. „Natürliche Verbündete?“ *Die Pegida-Debatte in der AfD zwischen Anziehung und Ablehnung for discussions on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s of Pegida phenomenon and its changing relationship with the right-wing party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in: *ibid.*, pp. 111-134.

Muszynski, Bernhard (Ed.). *Wissenschaftstransfer in Deutschland.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bei der Integration der gesamtdeutschen Hochschullandschaft*, Leske + Budrich, Opladen 1993

Nietzsche, Friedrich, *Also sprach Zarathustra*, Kritische Studienausgabe (KSA) Bd. 4,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Walter de Gruyter 1999

Rehberg, Karl-Siegbert. *Deklassierung der Künste als stellvertretender Gesellschaftsdiskurs. Zu Geschichte und Funktion des deutsch-deutschen Bilderstreites*. in: Karl-Siegbert Rehberg und Paul Kaiser (Ed.), *Bilderstreit und Gesellschaftsumbruch. Die Debatten und die Kunst aus der DDR im Prozess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erlin/Kassel, B&S Siebenhaar Verlag, 2013. pp. 23-63.

Yhee, Jean, *Division and Circulation of Memories: On the Role of Documentat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from a Cultural Memory Studies Perspective, to be published at UC Berkeley in 2016.

Das Projekt „Dokumentation der deutschen Einheit“,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Projektleiterin: Prof. Dr. Eun-Jeung Lee;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Dr. phil. Jean Yhee, Alexander Pfennig, Arne Bartzsch). Homepage: <http://www.geschkult.fu-berlin.de/e/tongilbu/index.html>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통일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분단 시기의 이질적 기억들이 통일 전후의 독일에서 집단적 기억으로 공식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문화학적 기억연구의 관점에서 문화적 기억을 담지하는 세 가지 종류의 문화적 제도의 사례를 검토한다. 첫째, 독일통일과정의 기록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정전적(正典的) 기억과는 달리 기록 기억은 이질적 기억들에 대한 더 큰 포섭 능력을 보인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둘째, 독일통일 후의 미술논쟁과 관련하여 예술의 창작뿐만 아니라 그 전시 및 관련 담론을 통해 공적인 문화적 기억으로 전화(轉化)된 기억은 그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문화적 기억에 대한 기억의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 마리엔펠데 긴급수용소 기념관의 전시를 중심으로, 탈동독 주민의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탈주민수용소가 통독 이후 어떻게 기념되고 있는지를 냉전으로 인한 왜곡된 분단 기억을 통일 이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문제의식 하에서 논의하였다.

상이한 배경을 가진 집단들 간에 또 그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에도 서로 이질적일 수 있는 분단 및 미래 통일 과정에 대한 기억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기술적(記述的)인 성질이 아니라, 흔히 가치 평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상이한 가치체계들이 반영된 기억들을 포섭하고 분열적 갈등을 창조적 갈등으로 승화시킬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문화적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문화적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통해 던져지는 질문이다.

핵심어

문화적 통일, 문화적 기억, 기억의 공간, 문화학, 기억 연구, 분단 기억, 통합, 독일미술 논쟁, 기록, 수용소, 다문화

ABSTRACT

Cultural Memories of Division and Unification. Memory Space and the Cultural Unification of Divided Nation-States

Jean Yhee*

Social and cultural institutions and rituals influence the political itinerary of both divided and unified nations significantly, especially when the presumed future images of the reunified nations have been projected from the collective memories of the past. Considering possible critical consequences of such a development, this paper looks into dynamic mechanisms of the cultural memories of the divided past during the Cold War in reunified Germany to examine the following question: How are the conflicting, diverse memories of the past between citizens of divided nation-states during the Cold-War eras to be preserved or dealt with, especially when the normative and restorative voice to achieve a 're'-unified nation often leads to a failure in seeing this diversity?

From the perspectives of Cultural Memory Studies, three examples of cultural institutions are chosen for discussion, all of which have been involved in the dynamic process of constructing, archiving, abolishing, revising, and circulating selected cultural memories: Archives (Documentation Project on the German Reunification), Art (the German Image Dispute or *der Deutsche Bilderstreit*), and History Memorials (the Refugee Center Museum in Berlin-Marienfelde or *Erinnerungsstätte Notaufnahmelager Marienfelde*).

Each of these cultural institutions offers different possibilities to maintain the diversity of the cultural memories of the past, which is enabled by and strengthens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value-pluralistic democracy in postwar Germany. It is argued that the approaches of Cultural Memory Studies on the collective past memories could contribute to the reconciliation and tolerance-building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 Dr. phil,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Frei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Key Words

Cultural Unification, Cultural Memory, Memory Space, Memory Studies, Memories of Division and Unification, Integration, Germany, Korea, Bilderstreit, Documentation, Notaufnahmelager, Refugee, Multiculturalism

남북한주민 마음의 비교: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정량적 분석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I.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통합'이 통일 및 사회통합의 핵심요소이며, 궁극적 형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마음의 통합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적 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우리는 독일과 예멘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통일이후 동·서독의 내적 통합 실패와 예멘의 통일, 재분단, 무력 통일 과정은 통일이 한순간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사회통합 과정이어야 한다는 사실, 특히 마음의 통합이 체제 통합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필수적 조건임을 잘 보여준다.

마음의 통합을 준비하는 사전 단계로서 분단 이후 남북한이 독립적으로 형성해 온 마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남북한 주민의 마음 전부를 다루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마음 중에서도 가치관, 그 중에서도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 이후 사회경제 변화를 끌고 가는 핵심동력이 시장화인 만큼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량적 분석에 기초해 남북한 주민의 마음을 비교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주민들의 마음, 즉 북한에서 나와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시점에서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증연구로서의 한계는 명백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북한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작업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마음을 비교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물질주의·개인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의 마음에 대한 우리 사회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객관성·실증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연구의 설계

1.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자 특성

이 연구에서는 북한주민의 물질주의·개인주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중인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현행법상 필자가 직접 북한주민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제 3국 관계자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남한에서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한주민 440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¹⁾.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인	내용	남한주민 빈도 및 비율	북한주민 빈도 ¹⁾
성별	남자	224(50.9)	9
	여자	216(49.1)	91
	합계	440(100.0)	100
연령	20대	93(21.1)	72
	30대	115(26.1)	14
	40대	122(27.7)	14
	50대	110(25.0)	-
	합계	440(100.0)	1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2.7)	-
	고등학교 졸업	199(45.2)	59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	228(51.2)	41
	기타	1(0.2)	-
	합계	440(100.0)	100
경제적 계층	상층	15(3.4)	4
	중간층	341(77.5)	57
	하층	84(19.1)	39
	합계	440(100.0)	100
거주지역 (남한주민)	서울시	183(41.6)	
	경기도	205(46.6)	
	인천시	52(11.8)	
	합계	440(100.0)	
거주지역 (북한주민)	평양시		67
	남포시		1
	양강도		1
	평안도		13
	함경도		4
	강원도		9
	무응답		5
	합계		100
제3국 체류기간 (북한주민)	1년 미만		21
	1년 이상 2년 미만		54
	2년 이상		20
	무응답		5
	합계		100
직업 (남한주민)	자영업/개인사업	168(38.2)	
	생산직 근로자	9(2.0)	
	판매/서비스직 근로자	54(12.3)	
	사무직 근로자	58(13.2)	
	관리직, 전문직	35(7.9)	
	가정주부	68(15.5)	

1)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 마음의 통합 연구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대학생, 대학원생	35(8.0)	
	무직, 퇴직, 기타	13(2.9)	
직업 (북한주민)	유급당·정 간부		4
	노동자		42
	사무원		6
	해외파견 노동자		45
	해외파견 간부		3
	합계		100
부업 경험 유무 (북한주민)	부업 경험 있음		15
	부업 경험 없음		84
	무응답		1
	합계		100
결혼 여부	결혼	305(69.3)	25
	미혼	130(29.5)	75
	기타	5(1.1)	-
	합계	440(100.0)	100
종교 (남한주민)	없음	251(57.0)	
	개신교	93(21.1)	
	천주교	47(10.7)	
	불교	44(10.0)	
	기타	5(1.1)	
정치적 입장 (남한주민)	진보적	119(27.0)	
	중도	240(54.5)	
	보수적	81(18.4)	
당원 여부 (북한주민)	당원		13
	비당원		85
	무응답		2
	합계		100

주: 1) 통상적으로 빈도와 함께 비율(%)을 표기하지만, 북한주민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100명으로서 빈도와 비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비율을 생략했음.

2. 척도 및 하위범주 구성, 조사 방법

이 글에서는 물질주의의 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설계함에 있어서 두 개의 선행연구를 활용했다. 물질주의에 관한 정량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Richins & Dawson (1992)의 방법론은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물질주의의 측정에 대해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한 전귀연(1998)의 방법론은 필자들이 약간 수정·보완했다.

이 글에서는 Richins & Dawson (1992)의 방법을 원용한 물질주의를 물질주의 1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음의 3가지 하위범주로 이루어진다. 첫째, 성공(success). 이는 축적된 소유물의 양과 질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판단하려는 성향을 가리킨다. 둘째, 중심성(centrality). 이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생활의 중심에 두는 성향을 말한다. 셋째, 행복(happiness). 이는 물질이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간주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전귀연(1998)의 방법을 원용한 물질주의를 물질주의 2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음의 4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만족. 이는 물질의 소유를 만족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많이 소유할수록 만족을 느끼는 성향을 가리킨다. 둘째, 질투. 이는 다른 사람의 성공, 행

복, 소유에 대해 느끼는 비유쾌함의 감정을 나타낸다. 셋째, 소유. 이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통제나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의향이나 경향을 가리킨다. 넷째, 인색. 이는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주거나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1의 경우, 성공, 중심성, 행복 등 3가지 범주에 대해 각각 5문항씩 모두 15개 문항을 만들었다. 물질주의 2의 경우, 만족에 대해 9개, 질투에 대해 5개, 소유에 대해 4개, 인색에 대해 5개 등 모두 23개의 문항을 구성했다. 또한 모든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또한 이 글에서는 개인주의의 측정을 위해 Triandis(1995)에 의해 개발되고 국내에서는 독고순(1999), 이정우(2006)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활용되고 있는 하위범주 및 설문문항을 사용했다.

트리안디스(Triandis)는 집단주의-개인주의에 수평-수직 차원을 추가해 4가지의 상이한 특성의 조합을 만들면서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수평-수직 성향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지만 위계성, 사회적 권위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집단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상호 위계질서가 확고하며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성원으로보다는 자율적인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남보다 탁월한 존재로 여기거나 높은 지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과 유사하지만 자신의 독특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들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원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것으로 여기며, 경쟁을 통한 사회적인 지위의 획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집단-개인주의의 4가지 범주에 대해 각각 8문항씩 모두 32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모든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3. 척도의 신뢰도 분석

본격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물질주의 1의 경우, 남한주민의 성공, 중심성, 행복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알파, 이하 동일)가 각각 0.78, 0.44, 0.79로, 북한주민의 그것들이 각각 0.60, 0.12, 0.63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주의 2의 경우, 남한주민의 만족, 질투, 소유, 인색의 신뢰도 계수가 각각 0.83, 0.82, 0.60, 0.68로, 북한주민의 그것들이 각각 0.81, 0.76, 0.15, 0.4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신뢰도 수준이 0.6 이상임을 고려하고, 남북한 주민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분석차원을 동일하게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 공히 물질주의 1에서는 중심성을, 물질주의 2에서는 소유, 인색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통계분석대상을 물질주의 1의 성공, 행복, 물질주의 2의 만족, 질투로 새롭게 설정했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쳐 산출한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물질주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알파)

구분	척도	문항수	남한주민		북한주민	
물질주의 1	성공	5	0.78	0.85	0.60	0.71
	행복	5	0.79		0.63	
물질주의 2	만족	9	0.83	0.89	0.81	0.82
	질투	5	0.82		0.76	

집단-개인주의에 대해서도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의 알파)를 산출했다. 개인주의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 모두, 당초의 8개 문항을 가지고 구한 신뢰도 계수가 남한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모두 0.61 이상이었다. 하지만 집단주의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 모두, 당초 8개 문항을 가지고 구한 신뢰도 계수가 남한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0.64 이상이었지만 북한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0.6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도 계수를 0.60 이상으로 높이고, 또한 남한주민 설문조사와 북한주민 설문조사를 동일한 항목들로 맞추어 주기 위해 남북한 주민 공히 수평적 집단주의에서는 4개 항목을, 수직적 집단주의에서는 3개 항목을 제거했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쳐 산출한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집단-개인주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알파)

구분		문항수	남한주민		북한주민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4	0.63	0.75	0.60	0.69
	수직적 집단주의	5	0.60		0.62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8	0.61	0.77	0.65	0.77
	수직적 개인주의	8	0.73		0.69	

Ⅲ. 연구의 결과1: 물질주의

1. 남북한 주민의 범주별 물질주의 성향 비교

남북한 주민들은 각각 물질주의의 개별 하위 범주에 대해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남한주민들의 각 하위범주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물질주의 1의 경우, 물질주의 행복의 평균점수(3.26)가 물질주의 성공의 평균점수(2.89)보다 상당히 높았다. 또한 물질주의 2의 경우, 물질주의 만족의 평균점수(3.16)가 물질주의 질투의 평균점수(3.08)보다 약간 높았다. 북한주민의 경우, 물질주의 행복의 평균점수(3.54)가 물질주의 성공의 평균점수(2.87)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물질주의 2의 경우, 물질주의 만족의 평균점수(3.41)가 물질주의 질투의 평균점수(3.16)보다 상당히 높았다.

남북한 주민은 물질주의 행복 성향이 물질주의 성공 성향보다 강하고, 또한 물질주의 만족 성향이 물질주의 질투 성향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다만 남한주민은 물질주의 행복 성향과 성공 성향의 정도 차이, 그리고 물질주의 만족 성향과 질투 성향의 정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북한주민은 각각의 정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도 관찰되었다.

<표 4> 남북한 주민의 범주별 물질주의 성향

구 분		남한주민 평균점수	북한주민 평균점수
물질주의 1	성공	2.89	2.87
	행복	3.26	3.54
	성공행복	3.08	3.21
물질주의 2	만족	3.16	3.41
	질투	3.08	3.03
	만족질투	3.13	3.28

2.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물질주의 성향 비교

이제는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 성향을 개별 설문항목별로 비교해 보기로 하자. 다만 모든 항목들을 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주의 1, 2의 24개 항목 중 상위그룹 5개 항목과 하위그룹 5개 항목을 골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5>에도 나타나 있듯이 남북한 주민 공통으로 상위그룹 5개 항목에 들어간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과 관계있다”와 “내 인생에 있어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을 소유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였다. 반면 남한주민에게만 상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부자인 친구를 보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으면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얻게 된다” 등이었고, 북한주민에게만 상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내게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했다면 더욱 행복했을 것이다” 등이었다.

하위그룹의 경우, 남북한 주민 공통으로 포함된 항목은 “옆집에 부잣집 사람이 이사와서 돈을 아주 잘 쓰는 것을 보면 왠지 나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진다”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앞에서는 기가 죽는다”였다. 반면 남한주민에게만 하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옆집에 부잣집 사람이 이사와서 돈을 아주 잘 쓰는 것을 보면 왠지 나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진다” 등이었고, 북한주민에게만 하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물질적인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만족에서 온다고 본다” 등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표 5>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물질주의 성향 비교: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남한주민		구분	북한주민	
평균 점수	항목		항목	평균 점수
3.50	부자인 친구를 보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상 위 그룹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과 관계 있다	3.84
3.48	돈이 많으면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얻게 된다		내게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	3.70

3.46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과 관계 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을 소유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3.68
3.45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무엇이든지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했다면 더욱 행복했을 것이다	3.68
3.43	내 인생에 있어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을 소유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는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3.61
2.80	나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하 위 그룹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앞에서는 기가 죽는다	2.79
2.73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물건을 소유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2.72
2.73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가져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만족에서 온다고 본다	2.61
2.68	옆집에 부잣집 사람이 이사 와서 돈을 아주 잘 쓰는 것을 보면 왠지 나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진다		옆집에 부잣집 사람이 이사 와서 돈을 아주 잘 쓰는 것을 보면 왠지 나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진다	2.60
2.65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앞에서는 기가 죽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물질적인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이다	2.45

3. 남북한주민 물질주의 성향의 변인별 차이 비교

남북한주민의 물질주의 성향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별²⁾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남북한주민 각각에 대해 물질주의 성공, 물질주의 행복, 물질주의 성공행복, 물질주의 만족, 물질주의 질투, 물질주의 만족질투³⁾ 등 6가지 범주에 대해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남북한주민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한 것이 아래의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남북한주민간에 물질주의의 각 범주별로 차이를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즉 물질주의의 범주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이 남북한주민간에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물질주의 성공의 경우, 남한주민은 성별에 따른 차이(남자>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주민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30대>20대>40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질주의 행복의 경우, 남한주민은 경제적 계층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

2) 이 글의 앞에 있는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9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10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한편 필자는 종전의 연구("북한주민의 마음에 대한 정량적 연구: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 2015)에서는 북한주민에 대해 9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했으나 이 글에서는 제3국 체류기간을 추가하여 모두 10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3) 물질주의 성공행복(10개 항목)은 물질주의 성공 5개 항목과 물질주의 행복 5개 항목을 합친 것이다. 당초에는 물질주의 성공, 행복, 중심성 각 5개 항목, 총 15개 항목을 물질주의 1이라고 명명했으나 신뢰도분석 및 조정과정을 통해 중심성 5개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물질주의 성공행복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물질주의 만족질투(14개 항목)는 물질주의 만족 9개 항목과 물질주의 질투 5개 항목을 합친 것이다. 당초에는 만족, 질투에 소유, 인색까지 합쳐 총 22개 항목을 물질주의 2라고 명명했으나 신뢰도분석 및 조정과정을 통해 소유, 인색 각 4개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물질주의 만족질투로 이름을 바꾸었다.

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북한주민은 어떤 변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질주의 만족의 경우, 남한주민은 어떠한 변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북한주민은 경제적 계층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만 남한주민은 앞에서 언급했던 물질주의 행복에서 경제적 계층과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적 계층에서는 남북한주민 모두 하층>중간층>상층이었고, 학력에서는 남한주민은 고졸>대졸이상이었지만 북한주민은 거꾸로 대졸>고졸이었다. 물질주의 질투의 경우, 남한주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어떤 변인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북한주민은 직업과 부업경험유무, 학력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직업에서는 당정간부>해외파견노동자>노동자>해외파견간부>사무원이었고, 부업경험유무에서는 부업경험 있는 사람들이 경험 없는 사람보다, 학력에서는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물질주의 질투 성향이 강했다.

물질주의 성공행복에서는 남북한주민 모두 어떠한 변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질주의 질투의 경우, 남한주민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북한주민은 경제적 계층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6> 남북한주민 물질주의의 변인별 차이: T검정 및 ANOVA 결과

범주	남한주민		북한주민	
	변인(집단)	변인별 차이 내역	변인(집단)	변인별 차이 내역
물질주의 성공	성별	남자>여자	연령대	30대>20대>40대
물질주의 행복	경제적 계층	하층>중간층>상층	-	
	학력	고졸>대졸이상>중졸이하		
물질주의 만족	-		경제적 계층	하층>중간층>상층
			학력	대졸>고졸
물질주의 질투	-		직업	당정간부>해외파견노동자>노동자>해외파견간부>사무원
			부업경험 유무	부업경험있음>부업경험없음
			학력	대졸>고졸
물질주의 만족질투	학력	고졸>대졸이상>중졸이하	경제적 계층	하층>중간층>상층
			연령대	30대>20대>40대

4. 남북한주민의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회귀분석결과

남북한주민의 물질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물질주의의 각 하위범주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9개,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10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남북한을 비교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 공차한계, 상승분산(VIF)을 구한 결과, 남한주민의 경우, 9개의 변수 모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지만 북한주민의 경우, 연령대와 결혼 여부, 성별과 당원여부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어 결혼 여부와 당원 여부를 독립변수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8개 변수는 공차한계가 모두 0.5 이상이고, VIF는 1.0~1.9 수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경우, 9개 변수 중에서 성별, 결혼여부, 학력, 직업, 거주지역, 종교유무, 정치적 입장은 더미변수로 처리했다. 북한주민의 경우, 10개 변수 중에서 성별, 부업경험 유무, 거주 지역, 학력, 직업은 더미변수로 처리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한주민은 물질주의 하위범주 모두(6개)에서, 북한주민은 물질주의 성공행복, 물질주의 만족, 물질주의 질투, 물질주의 만족질투 등 4개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남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물질주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즉 물질주의 성공을 제외한 5개의 하위범주에서 학력이 물질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물질주의 성공에서는 성별이 영향 요인으로, 물질주의 질투에서는 정치적 성향 중 진보성 여부가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북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물질주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물질주의 만족 등 3개 범주에서 경제적 계층이 물질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경제적 계층이 하층일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주의 만족에서는 학력과 직업 중 사무원 여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주의 질투에는 직업 중 사무원 여부와 부업경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남한에서는 5개의 하위범주에, 북한에서는 1개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남한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강했지만, 북한에서는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표 7> 남북한주민의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회귀분석결과

변인	물질주의 성공(β)		물질주의 행복(β)		물질주의 만족(β)		물질주의 질투(β)		물질주의 성공행복(β)		물질주의 만족질투(β)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성별(남자=1)	0.11*											
학력(고졸이하=1)			0.10*		0.10*	-0.38**	0.11*		0.10*		0.11*	
경제적 계층						0.29**				0.21*		0.32**
정치적 입장(남한, 중도=0)	진보						0.11*					
	보수											
직업(북한, 노동자=0)	당정간부											
	사무원						-0.20*			-0.28**		
부업경험유무(북한)								0.26*				
adjusted R ²	0.01 4.99*		0.03 6.57**		0.01 4.19*	0.23 9.77***	0.02 4.81*	0.10 6.07**	0.01 4.41*	0.03 4.10*	0.01 5.05*	0.09 9.68**

IV. 연구의 결과2: 집단-개인주의

1. 남북한 주민의 범주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집단-개인주의의 각 하위범주별로 남북한주민의 평균점수를 살펴보자. 우선 남한주민의 경우, 수직적 집단주의(3.8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수평적 집단주의(3.52)였고, 그 뒤가 수직적 개인주의(3.44)였으며, 마지막으로 수평적 개인주의(3.23)가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약간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직적 성향이 수평적 성향보다 약간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경우, 의외로 남한주민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주민도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집단주의(4.1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수평적 집단주의(4.12)였다. 다만 북한주민의 경우 남한주민과 달리 세 번째로 높은 것이 수평적 개인주의(3.94)였으며, 가장 낮은 것은 수직적 개인주의(3.75)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주민은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약간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주민은 남한주민과는 달리 수평적 성향이 수직적 성향보다 약간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각 범주별로 남북한 주민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등 모든 범주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평균점수가 남한주민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모두 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에서 남북한 주민의 성향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에서 남북한 주민의 성향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가 상대적으로 덜 강하고,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남북한 주민의 범주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구 분		남한주민 평균점수	북한주민 평균점수	비고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3.83	4.19	남 < 북 (0.36)
	수평적 집단주의	3.52	4.12	남 < 북 (0.60)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3.44	3.75	남 < 북 (0.31)
	수평적 개인주의	3.23	3.94	남 < 북 (0.71)

2.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1

남북한 주민의 집단-개인주의 성향을 개별 설문항목별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만 모든 항목들을 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개인주의 25개 항목 중 상위그룹 5개 항목과 하위그룹 5개 항목을 골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10>에도 나타나 있듯이 상위그룹 5개 항목이 남한주민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3개 항목, 수평적 개인주의 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주민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2개

항목, 수직적 집단주의 1개 항목, 수평적 개인주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상위 그룹은 남한주민이든 북한주민이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며 수평적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위그룹 5개 항목은 남한주민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2개 항목, 수직적 개인주의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주민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4개 항목, 수직적 개인주의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남북한 주민 공히 하위그룹은 모두 개인주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하위그룹에서 남한주민은 수직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북한주민은 수평적 성향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남북한 주민 공통적으로 상위그룹 5개 항목에 “친구나 동료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믿는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등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남한주민에게만 상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나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나도 남들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였고, 북한주민에게만 상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의존한다”였다.

하위그룹 5개 항목의 경우, 남북한 주민 공통적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남한주민에게만 하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나는 이기고 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쟁은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등이었고, 북한주민에게만 하위그룹에 들어간 항목은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었다. 결국 남북한 주민은 공히 경쟁과 개성을 수용하는 정도가 약하지만 남한주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을, 북한주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성을 수용하는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1: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남한주민			구분	북한주민		
분류	평균 점수	항목		항목	평균 점수	분류
HC	4.18	친구나 동료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상위 그룹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4.37	VC
HI	3.94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믿는다		친구나 동료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4.34	HC
HC	3.90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믿는다	4.30	HI
HC	3.86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의존한다	4.30	HI
HI	3.84	나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나도 남들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4.28	HC
HI	3.08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위 그룹	나는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3.55	VI

VI	3.07	경쟁은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55	HI
VI	2.97	나는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3.46	HI
VI	2.89	나는 이기고 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3.32	HI
HI	2.75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3.28	HI

3.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2

이번에는 남북한 주민의 집단-개인주의 성향을 다른 각도에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앞의 <표 11>에서 나타났듯이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등 모든 범주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평균점수가 남한주민의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그러면 25개 항목 가운데 남북한 주민의 평균점수 차이가 0.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항목들을 골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래의 <표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북한 주민의 평균점수 차이가 0.50 이상인 항목은 모두 다 북한주민의 평균점수가 높은 항목들이다.

우선 개인주의의 경우, 북한주민들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아울러 경쟁을 중시하고 경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집단주의의 경우, 가족을 중시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양보하려는 성향 또한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남북한 주민의 항목별 집단-개인주의 성향 비교 2: 평균점수 0.50이상 차이 항목

구분	항목	남한 주민 평균점수 (A)	북한 주민 평균점수 (B)	B-A
HC	친구나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는 능력껏 도와준다	3.36	3.89	0.53
VC	부모와 자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3.33	4.13	0.80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3.66	4.37	0.71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	3.13	3.95	0.82
HI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의존한다	3.69	4.30	0.61
VI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결과)를 얻으면, 나는 종전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	3.71	4.21	0.50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3.18	4.16	0.98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일을 못하면 기분이 나쁘다	3.14	3.97	0.83
	경쟁은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3.07	3.82	0.75
	나는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2.97	3.55	0.58
	나는 이기고 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2.89	3.68	0.79

4. 남북한주민 집단-개인주의 성향의 변인별 차이 비교

남북한주민의 집단-개인주의가 인구사회학적 변인별⁵⁾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남북한주민 각각에 대해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등 6가지 범주에 대해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남북한주민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한 것이 아래의 <표 12>에 요약되어 있다.

앞에서 보았던 물질주의와는 달리, 집단-개인주의에서는 남북한주민간에 각 범주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공통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몇 개 눈에 띈다. 수평적 개인주의의 경우 연령대, 개인주의의 경우 연령대, 결혼여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더욱이 남북한주민간에 변인별 차이 내역도 연령대는 30대>20대>40대로, 결혼여부도 미혼>결혼으로서 동일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집단-개인주의의 각 범주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변인이 남북한주민간에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수평적 집단주의의 경우, 남한주민은 어떠한 변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북한주민은 연령대(40대>20대>30대), 부업경험유무(경험있음>없음), 거주지역별(평양시>평안도>함경도, 양강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거꾸로 수직적 집단주의의 경우, 북한주민은 어떠한 변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한주민은 성별(남자>여자), 경제적 계층(하층>중간층>상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수평적 개인주의의 경우, 남북한주민 공히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지만 남한주민은 이밖에도 결혼여부(미혼>결혼),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에 따른 차이가, 북한주민은 직업(당정간부>해외파견간부>노동자 등), 경제적 계층(하층>중간층>상층)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수직적 개인주의의 경우, 남한주민은 성별(남자>여자), 직업(생산직 근로자>대학생, 대학원생 등), 종교(불교>없음>개신교>천주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북한주민은 연령대(20대>40대>30대), 결혼여부(미혼>결혼)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집단주의의 경우, 남한주민은 경제적 계층(상층>중간층>하층)에 따른 차이만이, 북한주민은 부업경험유무(경험있음>없음)에 따른 차이만이 나타났다. 개인주의의 경우, 남북한주민 공히 연령대,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지만 남한주민은 이밖에도 성별(남자>여자), 직업(생산직 근로자>무직, 퇴직>관리직, 전문직 등), 거주지역(경기>서울>인천)에 따른 차이도 존재했다.

<표 12> 남북한주민간 집단-개인주의 성향의 변인별 차이 비교: T검정 및 ANOVA 결과

범주	남한주민		북한주민	
	변인(집단)	변인별 차이 내역	변인(집단)	변인별 차이 내역
수평적 집단주의	-		연령대	40대>20대>30대
			부업경험 유무	부업경험있음>부업경험없음
			거주지역	평양시>평안도>함경

5) 앞에서의 물질주의와 마찬가지로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9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10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도, 양강도>강원도>남포시		
수직적 집단주의	성별	남자>여자	-			
	경제적 계층	하층>중간층>상층				
수평적 개인주의	연령대	30대>20대>40대>50대	연령대	30대>20대>40대		
	결혼여부	미혼>결혼	직업	당정간부>해외파견간부>노동자>해외파견노동자>사무원		
	거주지역	서울>경기>인천	경제적 계층	하층>중간층>상층		
수직적 개인주의	성별	남자>여자	연령대	20대>40대>30대		
	직업	생산직근로자>대학생, 대학원생>관리직, 전문직>무직, 퇴직>자영업, 개인사업>사무직근로자>판매/서비스직근로자>가정주부	결혼여부	미혼>결혼		
	종교	불교>없음>개신교>천주교				
집단주의	경제적 계층	상층>중간층>하층	부업경험유무	부업경험있음>부업경험없음		
개인주의	성별	남자>여자				
	연령대	20대>30대>40대>50대			연령대	20대>30대>40대
	결혼여부	미혼>결혼			결혼여부	미혼>결혼
	직업	생산직근로자>무직, 퇴직>관리직, 전문직>대학생, 대학원생>자영업, 개인사업>판매/서비스직근로자>주부				
	거주지역	경기>서울>인천				

5. 남북한주민의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회귀분석결과

남북한주민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개인주의의 6개 하위범주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9개,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10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서 남북한을 비교한 결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물질주의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에 대

해서는 다중공선성 문제 때문에 결혼 여부와 당원 여부를 독립변수에서 제외하고 8개의 독립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남한주민의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어서 9개의 변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더미변수는 앞에서 물질주의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리했다.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주민 공히 집단-개인주의의 모든 하위범주(6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남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집단-개인주의 하위범주(각각 3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대, 경제적 계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쳤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개인주의 등 개인주의 성향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계층은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집단주의에 영향을 미쳤는데 계층이 낮아질수록 이들 성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집단-개인주의 하위범주(각각 3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업경험 유무와 제3국 체류기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업경험 유무는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집단주의 등 집단주의 성향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부업경험이 없는 사람이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개인주의 등 개인주의 성향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제3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주민의 경우, 물질주의의 각 하위범주에 가장 많은 영향(5개의 하위범주)을 미친 것은 학력이었지만 집단-개인주의에서는 학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북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물질주의 하위범주(3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계층이었지만 집단-개인주의에서는 경제적 계층이 하위범주 1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남북한주민 모두,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소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남북한주민의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결과

변인	수평적 집단주의(β)		수직적 집단주의(β)		수평적 개인주의(β)		수직적 개인주의(β)		집단주의(β)		개인주의(β)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성별(남자=1)			0.15**				0.19***					0.14**
연령대					-0.13**		-0.13**	0.30**			-0.16**	-0.37**
경제적 계층			-0.12*		-0.10*	0.30**			-0.11*			
직업 (남한, 학생=0)	자영업/개인사업											
	근로자											
	관리/전문직					0.09*						
직업 (북한, 간부)												
			0.11*									

	북한주민	3.75	0.56		
수직적 개인주의	남한주민	3.23	0.48	-13.344	0.000***
	북한주민	3.94	0.49		
집단주의	남한주민	3.66	0.43	-10.393	0.000***
	북한주민	4.15	0.42		
개인주의	남한주민	3.34	0.38	-11.659	0.000***
	북한주민	3.84	0.45		

*** p<0.001

V. 맺음말

1. 선행연구와의 비교

이번 조사와 거의 동일한 집단-개인주의 설문항목(32개)을 가지고 남북한주민의 집단-개인주의 성향을 비교한 선행연구로는 독고순(1999), 이정우(2006)가 대표적이다⁷⁾. 다만 이들은 북한주민을 직접 조사할 수 없어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는 달리 이 글에서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독고순(1999)의 경우, 1999년에 탈북성인 108명, 남한주민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를 단순 취합해 남북한주민의 각 범주별 평균점수를 비교했더니 수평적 개인주의를 제외하고,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에서 탈북주민이 남한주민보다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즉 각 범주별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분산분석(ANCOVA) 결과, 집단주의에서는 남북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남북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평적 개인주의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그리고 수직적 개인주의는 거꾸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통계적 분석으로는 설문조사결과의 단순취합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이정우(2006)의 경우, 2005년에 탈북 청소년 93명, 남한청소년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를 단순취합해 남북한 청소년의 각 범주별 평균점수를 비교했더니 북한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보다 집단-개인주의 4개 범주 모두에서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즉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 검정 결과,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나머지 범주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평적 개인주의를 제외하고,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에서 탈북 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분산분석(ANCOVA) 결과도 T 검정 결과와 동일하다.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기 이전 단계, 즉 설문조사결과의 단순취합 단계에서 보면 이번 조사 결과는 남북한비교의 측면에서 이정우(2006)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즉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등 집단-개인주의 4개 범주 모두에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성향이 강한 것이다. 또한 수평적 개인주의를 제외하고, 수평적 집단주의 등 3개 범주에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독고순(1999)의

7)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 성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결과와는 약간 상이하다.

나아가 T검정, 공분산분석(ANCOVA)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후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약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 조사는 T검정 실시 이후에도 상기의 4개 범주 모두에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정우(2006)에서는 수평적 개인주의를 제외하고,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등 3개 범주에서 탈북 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⁸⁾. 또한 공분산분석(ANCOVA) 이후 이번 조사에서는 수평적 집단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범주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정우(2006)에서는 공분산분 이후 수평적 개인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범주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분산분석(ANCOVA) 후의 이번 조사결과는 수평적 개인주의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그리고 수직적 개인주의는 거꾸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난 독고순(1999)의 공분산분석 후 조사결과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편 이번의 조사결과는 종합적으로 보아 독고순(1999)의 조사결과와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이정우(2006)의 조사결과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는 이번 조사결과가 측정상의 오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물론 이정우(2006)의 조사결과와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차이, 즉 북한이탈주민인지 북한현지주민인지에 따른 차이인지, 조사시점의 차이, 즉 2005년 조사와 2014년 조사에 따른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2. 요약과 결론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물질주의 행복 성향이 물질주의 성공 성향보다 강하고, 또한 물질주의 만족 성향이 물질주의 질투 성향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다만 남한주민은 물질주의 행복 성향과 성공 성향의 정도 차이, 그리고 만족 성향과 질투 성향의 정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북한주민은 각각의 정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도 눈에 띈다.

남북한주민을 각 범주들의 평균점수만 가지고 비교하면 물질주의 성공과 질투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물질주의 행복과 만족에서는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경변인을 통제된 이후의 통계분석(ANCOVA) 결과, 남북한주민간에는 물질주의의 4개 범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집단-개인주의에서는 남한주민의 경우, 수직적 집단주의 > 수평적 집단주의 > 수직적 개인주의 > 수평적 개인주의의 순으로 나타났고, 북한주민의 경우, 수직적 집단주의 > 수평적 집단주의 > 수평적 개인주의 > 수직적 개인주의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주민 공히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약간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의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반면 남한주민은 수직적 성향이 수평적 성향보다 약간 강하고, 북한주민은 거꾸로 수평적 성향이 수직적 성향보다 약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남한주민은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북한주민은 대인관계에서 평등성을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북한주민의 성향을 개별 범주별로 비교하면, 배경변인을 통제된 통계분석(ANCOVA) 결과, 수평적 집단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범주, 즉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주민보다 각각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일

8) 독고순(1999)은 남북한주민 비교를 위한 T검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론이 필요하다. 즉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모두 다 강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의 조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집단-개인주의 이론이 등장한 초기에는 이 두 가지를 단일선상의 양극적(bipolar)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독립적인 개념/범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으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낮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으면 집단주의적 성향이 낮을 수도 있지만 둘 다 높거나 둘 다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성열·이홍표 1994; 한규석 1997; 황호영·최영균 2003; 남희은 외 2014).

따라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모두 다 강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이 1990년대 초부터의 경제난 이후 시장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북한에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주민에게 있어서 물질주의의 경우, 남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달되고 있음⁹⁾을, 나아가 개인주의는 오히려 남한주민보다 강할 수도 있음을 이번 조사는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무철(2006), 김창희(2009) 등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에서 개인주의의 확산은 집단주의의 약화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따라서 북한에서는 시장화의 진전으로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집단주의의 약화 여부 및 그 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함을 이번 조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남북한주민의 집단-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설문항목별 비교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인주의의 경우, 북한주민들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아울러 경쟁을 중시하고 경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집단주의의 경우, 가족을 중시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양보하려는 성향 또한 남한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발달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배급·공급 체계가 사실상 붕괴함에 따라 주민들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시장화의 확산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경제난 이후 집단주의 성향은 약화되고는 있지만 남한주민에 비해서는 아직도 강한 편이다. 물론 이는 북한주민의 집단주의 성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한주민의 집단주의 성향이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전자의 원인과 후자의 원인 모두

9) 이와 관련, 남한의 탈물질주의 가치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잉글하트(Inglehart)의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변화이론의 한국사회 적용 여부 문제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루어냈고 또한 1990년대 이후 사회정치적으로도 안정됨에 따라 탈물질주의 가치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 추세가 다소 후퇴하고 있으며, 아직 서구의 선진국가들보다는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 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긴 호흡에서 보았을 때 탈물질주의 가치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탈물질주의 추세는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는데 학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박재흥·강수택 (2012), pp.72-75, 91-93을 참조.

다 작용했기 때문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이와 관련, 북한의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있지만 '와해'되는 수준까지는 달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울러 북한주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층위의 집단주의들이 약화의 정도가 상이하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사회 전체에 대한 집단주의는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된다고 해도, 가족에 대한 집단주의는 상대적으로 작게 약화되었을 수 있다. 어찌 되었든 집단주의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범주이기 때문에 집단주의의 변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집단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보다 하위의 범주들의 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에 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받는다.

한편 남북한주민의 물질주의 및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주민의 경우, 물질주의의 각 하위범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학력이었지만 집단-개인주의에서는 학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물질주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적 계층이었지만 집단-개인주의에서는 경제적 계층이 하위범주 1개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집단-개인주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대, 경제적 계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주민의 경우, 가장 많은 집단-개인주의 하위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업경험 유무와 제3국 체류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남북한주민 모두,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하 며, 남북한주민간에도 물질주의 및 집단-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번의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은 매우 잠정적, 제한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의 북한주민에 대한 조사는 신뢰성의 문제, 특히 대표성의 면에서 적지 않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개인주의에 대해 보다 객관적·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3국 주민과의 비교도 필요하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창희.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 2009.
- 남희은 외. “대학생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에 따른 탈북자에 대한 태도 및 통일 인식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연구논집』, 60권, 2014.
-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박재흥·강수택. “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 제46집 4호. 2012.
- 양문수. “북한주민의 마음에 대한 정량적 연구: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통일문제 연구』, 제27권 2호. 2015.
- 이무철.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과 개혁·개방 의식: 북한이탈주민 면접 조사를 통한 추론.”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2호, 2006.
- 이정우. “탈북 청소년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Vol.13 No.2, 2006.
- 전귀연.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998.
- 한규석.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서울: 성원사, 1997.
- 한성열·이홍표.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4(1).
- 황호영·최영균.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주의-집단주의 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제5권 제1호. 2003.
- Richins, M. L. & S. Dawson,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1992.
- Triandis, Harry C. *Individualism & Collectivism*. Colorado: Westview Press. 1995.



Urban Aspirations: (Post)Cold War Seoul- Berlin in Comparative Anthropology

Jin-Heon Jung (정진헌)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us and Ethnic D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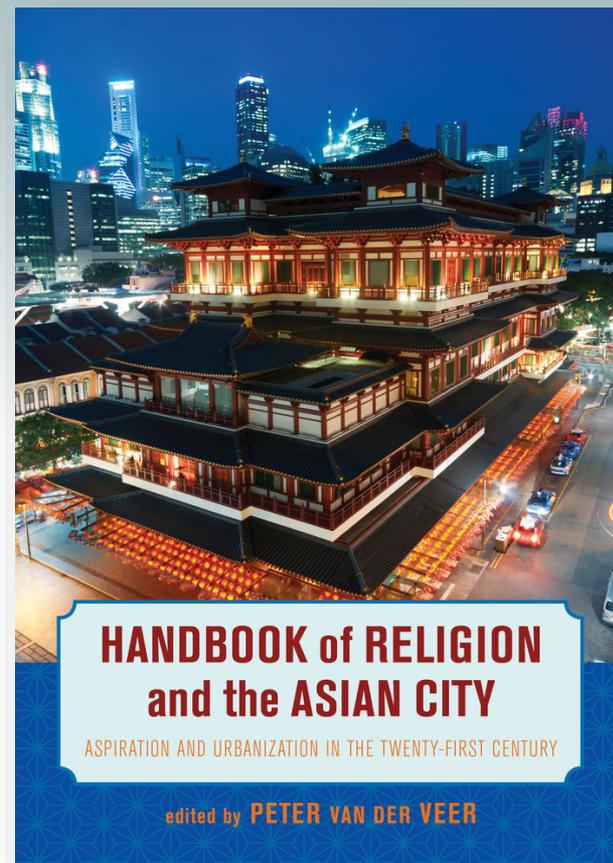
Max-Planck-Institut zur Erforschung multireligiöser und
multiethnischer Gesellschaften

Outline 개요

- Project Background 프로젝트 배경 소개
 - Max Planck Institute's main project
막스플랑크 중점 연구
 - The Seoul Lab 서울랩 결성 (글로벌 한국학 과제 선정)
- (Post)Cold War Urban Aspirations: Seoul-Berlin in Comparative Perspectives 도시의 열망: 서울-베를린 비교
 - Theoretical Concerns 주요 문제 의식 (이론과 개념들)
 - Field research process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
 - Methodology 방법론
- Discussion 질의응답 및 토론

Urban Aspirations: Megacities and Relig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s

- Problems of European centric modernization- secularization theory
 유럽 중심의 근대화-세속화 이론의 문제 제기
- Anthropological comparative studies on Asian megacities with the lens of religion
 아시아 거대도시들 (인도 뭍바이,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한국 서울 등)을 중심으로 종교를 렌즈로 인류학적 비교 연구



Urban Aspirations in Seoul:

Religion and Megacities in Comparative Studies

(aka the Seoul Lab at MPI)



Project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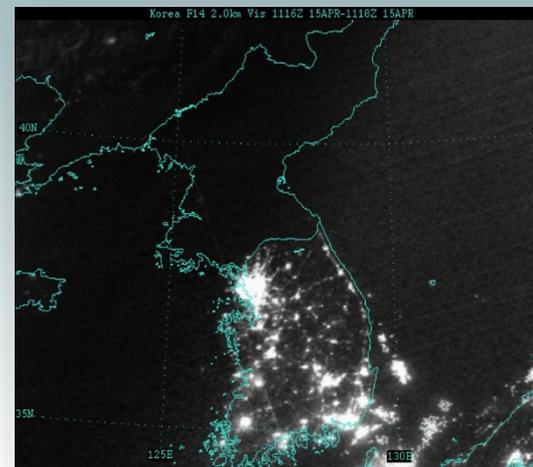
- Funding:
 - Period: Oct. 2011 ~ Sep. 2016
 - Resource: Korean Government by way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o promote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 Amount: 300 Million KRW (200,000 Euros) / Year
- Team:
 - Coordinator: Dr. Jin-Heon Jung (MPI MMG)
 - Collaborative Researchers
 - Prof. Doyoung Song (Hanyang Univ. Korea)
 - Prof. Hyun Mee Kim (Yonsei Univ. Korea)
 - Ass. Prof. Nicholas Harkness (Harvard, USA)
 - Ass. Prof. Ju Hui Judy Han (U of Toronto, Canada)

Individual Projects of Each Researcher



Religious Ideological Competition and Development in Cold War Cities

- Seoul, Berlin & Pyongyang Comparison (by Jin-Heon JUNG, MPI MMG)
 - Seoul as the capital of a divided nation
 - Through North Korean migrants' life trajectories en route to and in Seoul
 - Christian morality and spirituality forging a politico-ideological landscape of Seoul
 - Compare the role of religious and political schemes experienced by the migrants with the cases in other capitals such as Berlin and Pyongyang



Places of Islam in Seoul

- New experimentation in the post-colonial and globalizing Seoul (by SONG, Doyoung, Hanyang Univ.)



-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Muslims' everyday life in Seoul
- the adjustment strategy and the implication of religious space for Muslim migrant workers in Seoul
- the perceptions and communications of Muslims, among the religious communities of Seoul

In Pursuit of Religious Perfection

- Women, Intimate Labor, and Gendering Seoul (by KIM, Hyun Mee, Yonsei Univ.)
 - the ‘gendered’ aspect of Seoul in terms of people’s religious practices and lived experiences
 - gender and migration as pilgrimage
 - womens’ religious activities to enhance self-improvement and therapeutic self in Seoul



The Social Semiotics of Aspiration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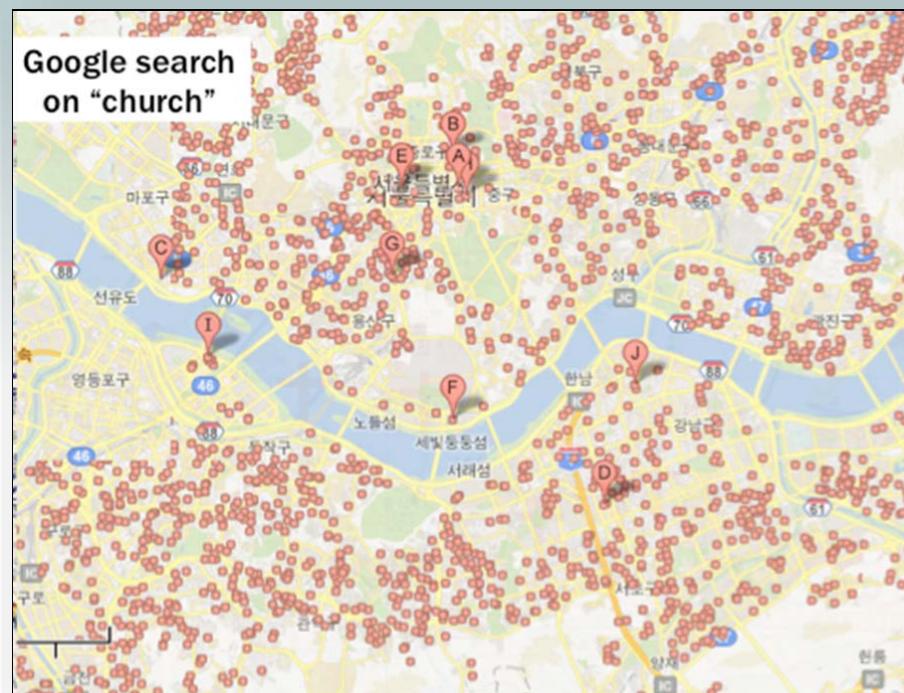
- By Nicholas HARKNESS, Harvard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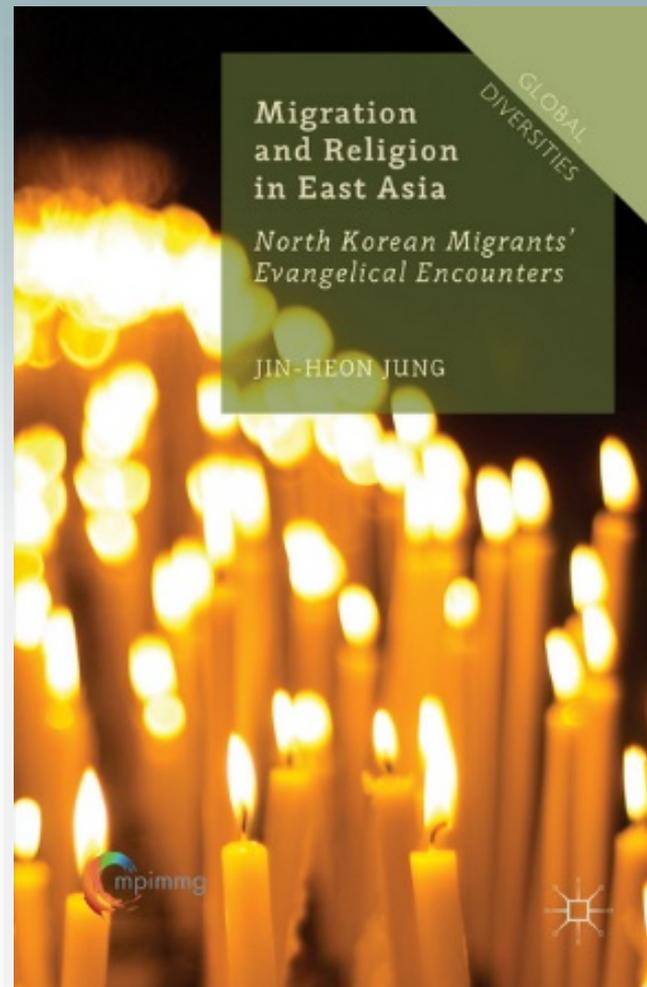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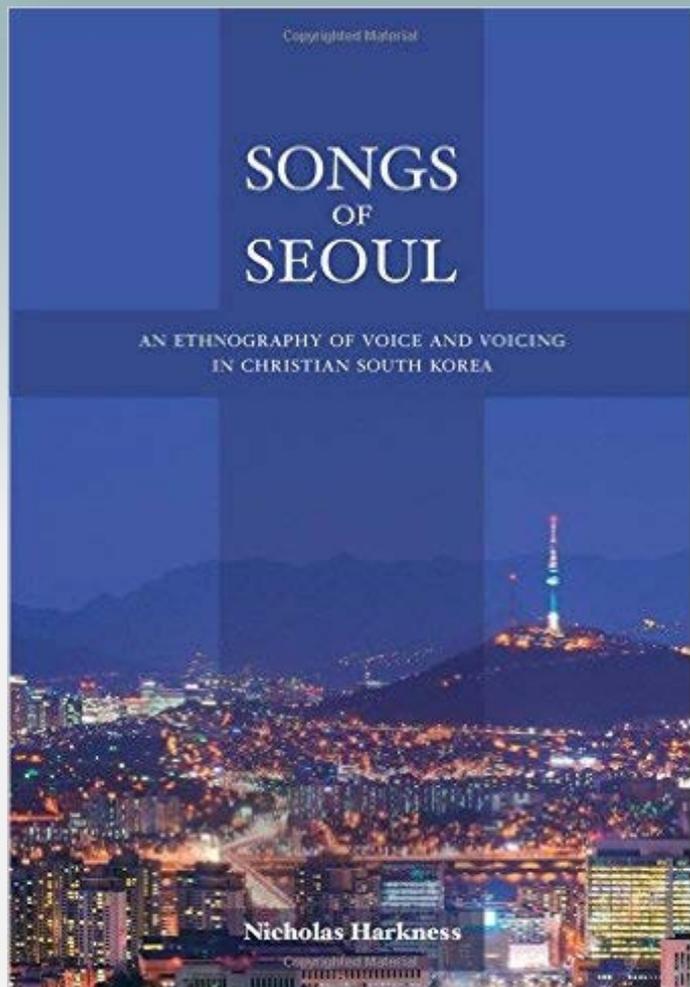


- Intersection of urban aspiration and religion in terms of communicative interaction in Seoul
- The relationship between semiotic differentiation in communicative interaction and cultural model of social transformation

Megachurches/Microchurches

- Politics of Scale, Space, and Growth in Seoul (by Ju Hui Judy HAN, University of Toronto)
 - The uneven geography of Korean church in terms of scale and space
 - How the space of church growth implicates competing and contested aspi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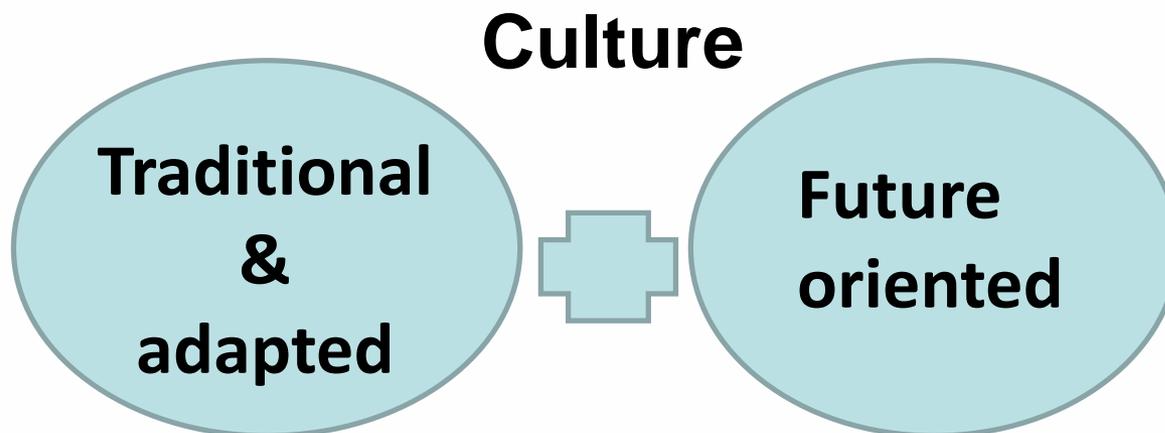


(Post)Cold War Urban Aspirations

- Main theoretical and conceptual concerns
 - Aspiration 열망
 - Religion 종교
 - Diaspora in the transnational context 초국가적 맥락에서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열망 Aspiration

- Drawing on Arjun Appadurai (2004 & 2014)
 - a) the future-oriented desires and practices
 - b) more than such cognitive actions as hoping, dreaming, anticipating, etc.
 - c) the positive ways and processes of designing and making efforts to achieve the mutual ends through interactions with other groups of people, and, in religion, with divine being



도시, 접촉공간 The Urban as Contact Zone

- Mary Louis Pratt (1992)

“social spaces where disparate cultures meet, clash, and grapple with each other, often in highly asymmetrical relations of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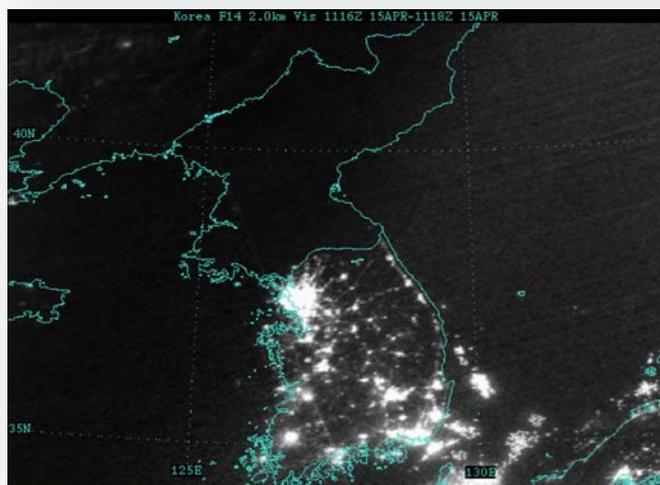


종교 Religion

- Drawing on Thomas Tweed (2005)
 - in the context of *crossing* and *dwelling*, that enable and constrain
 - a) *terrestrial crossings*, as devotees traverse natural terrain and social space beyond the home and across the homeland;
 - b) *corporeal crossings*, as the religious fix their attention on the limit of embodied existence; and
 - c) *cosmic crossings*, as the pious imagine and cross the ultimate horizon of human life

Diaspora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 Triadic Relationship (i.e., Safran 1991, Vertovec 1997)
 - a) globally dispersed yet collectively self-identified ethnic groups
 - b) the territorial states and contexts where such groups reside, and
 - c) the homeland states and contexts whence they or their forebears came



e.g. diaspora without homeland
Or
Homeland making

The Methods for project

- The combination of qualitative ethnographic research and comparative approaches with other megacities.
 - Literature reviews for the comparative case studies
 - Ethnographic fieldworks
 - Statistical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 Surveys, mapping and interpretation of geo-cultural processes
 - Cultural geography's mapping method

현지조사 진행중

- 유의미한 베를린 공식 문건 및 대중 매체 자료 검토 및 분석
- 비교연구를 위한 타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연구물 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
- 생애사 모음
- 심층인터뷰:
 - 파독 광부, 간호사 출신 이주민 1세대
 - 종교 단체 관계자 (목사, 신부, 선교사, 스님 등)
 - 1.5세, 2세, 최근 이주민 (학업, 생업 등 장단기 체류)
- 참여관찰:
 - 한국 출신 이주민 참여/주도 사회 및 종교 단체 활동: 위안부문제 한-일-독 여성모임, 오월민중제, 통일운동, 선교활동 등









Jesus am Kreuz

Matthäus 26, 67-71. Jesus vor dem jüdischen Rat. Jesus vor dem römischen Statthalter. Jesus vor dem römischen Statthalter zum Passfest einen Gefangenen begnadigte.

Golgatha: Jesus stirbt

Matthäus 27, 1-66. In der von der neunten Stunde bis zur neunten Stunde. Jesus wird gekreuzigt. Jesus stirbt. Die drei Frauen am Grab.

Das Begräbnis

Matthäus 27, 67-68. Am nächsten Tag aber, der auf den Rüsttag folgt, versammelten sich die Hohenpriester und die Pharisäer bei Pilatus.

Die Grabwache

Matthäus 27, 69-74. Am nächsten Tag aber, der auf den Rüsttag folgt, versammelten sich die Hohenpriester und die Pharisäer bei Pilatus.

Der Wille Gottes

Johannes 6, 40. Denn das ist der Wille Gottes, dass jeder, der den Sohn sieht und glaubt, nicht verloren werde.

Jesus Christus ist Das Brot des Lebens

Johannes 6, 30-31. Dies ist das Brot, das aus dem Himmel herab kommt. Ich bin das lebendige Brot, das aus dem Himmel herabgekommen ist.

Johannes 6, 36. Jesus glaubt, hat ewiges Leben, wer an den Sohn nicht gehort, wird das Leben nicht sehen, sondern den Zorn Gottes bleibt auf ihm.

Johannes 6, 37-39. Denn wie der Vater die Toten auferweckt und lebendig macht, so macht auch der Sohn lebendig, welche er will.

Johannes 6, 40-41. Dies ist das Brot, das aus dem Himmel herab kommt. Ich bin das lebendige Brot, das aus dem Himmel herabgekommen ist.

Das Weltgericht

Offenbarung 20, 10-15. Und der Teufel, der die Nationen verführte, wurde in den Abgrund des Schwefelsee geworfen, wo sowohl das Tier als auch der falsche Prophet sind.

Jesus, der Herr, kommt

Offenbarung 22, 1-5. Und siehe, ich komme bald, Glückselig, der die Worte der Weissagung dieses Buches bewahrt!

Johannes 6, 33. Ihr forsigen Sohn zeugt, in Leben zu Sie weis hin, 40. Ab zu Jesus das ewig 2. Timotheus Die Heilig den Weg dir zuteil sich auf Je Alle 5 Geist e Lehre. D Hebräer 4, 1 Lebendige scharf dige durch und Ged an Bein, u Ged an Herzen Die Au Johannes 16, 1 Wenn d er den M dap sie zeigen w Die f chris Römer 5, 8 Gott darin, d ist, als 1. Johanne Wer d hat das nicht h Dies l ihr wis die ihr Gotte Johanne Jesus und d wird w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us and Ethnic Diversity

Max-Planck-Institut zur Erforschung multireligiöser und
multiethnischer Gesellschaften

Hermann-Föge-Weg 11, D-37073 Göttingen, Germany

tel. +49/0 551 4956-0, fax +49/0 551 4956-170

www.mmg.mpg.de

‘노동자 국가?’, 북한 노동계급의 마음체계
‘Worker’s State?’, Mind-System of Working-Class in North-Korea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Yoon, Cheol Gee(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Koo, Kab Woo(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목차

- I. 문제제기
- II.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
- III. 북한의 노동계급 이론과 실제
- IV. 시장화와 노동계급 정체성의 변화
- V. 결론을 대신해서

I. 문제제기

북한은 2016년 5월 6일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국내외에 공표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소련 및 동유럽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존 사회주의는 역사가 되었지만, 북한은 예외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지난 7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3대 권력세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끝까지 고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선언했다.

현존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혁명과 정치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북한체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계급 없는 사회’로 규정해왔다. □주체의 계급리론□은 북한사회에서 계급을 노동자, 농민, 인텔리 등 세 계급으로만 분류한다(김천식 2001). 북한사회에 공식적으로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혁명의 영도계급으로 취급된다. 그

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계급은 노동계급화 되어야 한다.

북한의 계급이론은 노동계급을 혁명과 정치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생산과 경제관리의 주체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의 노동자는 정치경제적으로 수령과 당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노동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언제나 수령과 당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 충성은 결국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현된다. 노동계급은 이러한 현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인다. 북한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이와 같은 강요된 정체성은 체제 정당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북한 노동계급은 1990년대 경제위기와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 노동계급의 정체성 위기는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장마당(시장)'이란 공간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집단의 형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당과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과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계급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난 주민들을 노동자 국가를 표방하는 북한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까지 규정할 근거는 아직 미비하다.

II.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

마르크스([1875]1985)는 『고타강령 비판(*Kritik, des Gothaer Programms*)』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양식의 성립을 통한 모순의 해결이 단계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비록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는 과거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인 흔적이 남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차츰 해결되어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공산주의가 높은 단계에 이르면, 개인이 노동분업에 예속된 상태가 사라지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간의 차별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는 이후 '사회주의'로 명명되었으며,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과정 가운데 존재하는 과도기 사회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며, 또 특정 부분에서는 자본주의적 모순이 지양된 사회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심각한 논쟁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서술이 불명확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현

실에 실재하는 사회주의가 이론적 사회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은 논쟁의 발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쟁의 주요한 축이 되는 문제들 - 즉 (1) 사회주의에서의 가치법칙, (2) 사회주의에서의 계급, (3)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국가소멸 - 에 관해서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주의에서의 가치법칙 관철 여부에 관한 문제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집단주의 사회 내부에서 생산자는 생산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여기서 생산물에 체현된 노동은 이러한 생산물의 가치로서, 즉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속성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노동은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총노동의 구성요소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MEGA 25, 13).”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에서 생산물이 가치로서의 속성을 지니지 않게 된다는 점과 총노동시간의 노동분할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에서 가치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크의 해석에 따르면 가치법칙이 오직 상품생산 체제에서만 작동하며, 상품생산의 종언과 함께 그것의 작동 역시 멈추게 된다고 설명하였다(Meek 1956, 257). 『반뒤링론(Anti-Dühring)』에서 엥겔스(Engels 1987)는 뒤링(Dühring)이 상상속의 사회(Phantasiegesellschaft)에서 기존사회의 법칙, 즉 가치법칙이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비판하면서, 가치법칙의 작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구별짓는 특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MEW 20, 291). 미크(Meek)는 마르크스의 견해 역시 엥겔스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바그너(Adolf Wagner)에 대한 연구 -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그의 사회주의 체제의 초석(cornerstone)을 구성한다. - 의 답변에서 마르크스 자신의 가치론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부르주아 관계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Meek 1956, 259에서 재인용).

물론 반대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에서도 가치법칙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해석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서 공급, 수요, 그리고 가치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는 과정 중 “(단지 생산이 사회의 의식적이고 미리 계획된 통제 하에 있을 때, 사회가 특정한 품목의 생산에서 사용할 노동시간의 양과 그러한 품목에 대한 사회의 수요량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정립할 것이다.)”라는 괄호안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가치법칙이 사회주의에서

도 지속적으로 관찰될 것이라고 보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Meek 1956, 260). 그러나 이는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가치법칙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법칙이며(Meek 1956, 261), 따라서 생산적 활동의 배분이 의식적인 통제 하에 있는 한 가치법칙은 적용될 수 없고 그 타당성과 중요성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Sweezy 1956, 53). 가치법칙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칙이라는 점을 간과한 해석이다(정운영 1993, 115).

2. 사회주의에서 계급의 존재에 관한 문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적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사회화가 실현된다. 비록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 아직까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에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초로 하는 특권계급에 의한 잉여생산물의 수취와 분배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전체 사회적 노동 시간 가운데 자신이 제공한 노동시간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는 평등하지 못하다. 개인들 사이에 노동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자연적 특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마르크스는 이해했다. 하지만 적어도 생산자로서 노동에 따라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모두 평등하다(MEGA 25, 13~14).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모든 잉여생산물의 수취가 사라지고, 대신에 개인의 발전과 모두의 발전이 대립되지 않는 연합체가 형성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수취방식과 기존의 모든 수취방식을 모두 폐지해야만 사회적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MEW 4, 472)...(중략)...발전과정에서 계급적 차이가 사라지고, 모든 생산은 연합한 개인들의 수중에 있게 된다. 그래서 공적권력(*öffentliche Gewalt*)은 그 정치적 성격을 잃는다. 정치권력은 본래의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한 계급의 권력이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반드시 계급으로 통일되고 혁명을 통해서 지배계급이 되며, 지배계급으로서 과거의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gewaltsam*) 폐지시킨다면, 그 결과 이러한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대립의 존재조건, 주로 계급의 존재조건, 그리고 이에 따라 계급으로서 자신의 지배까지 폐지시킨다. 계급과 계급대립이 존재하는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MEW 4, 482).”

엔겔스 또한 사회주의에서 생산력은 ‘연합된 생산자들의 손(*Händen der assoziierten Produzenten*)’에 있게 되고(『반뒤링론』 MEW 20, 261), 생산은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동등한 연합’(『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MEW 21, 166)에 기초하여 조직된다고 주장했다(Marcuse 2000, 37).

개인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잉여생산물은 노동자 연합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수취된다. 노동자 연합은 공동체의 생산수단으로 노동하고 또 수많은 개인들의 노동력이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지출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을 말한다(MEW 4, 482). 또한 잉여생산물의 분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으로 측정되는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국가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정치적 지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계급관계가 소멸된다고 설명한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혁명의 첫 단계는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으로 상승시키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로부터 모든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에 집중시키면서, 가능한 급속하게 생산력의 규모를 증대시킨다(MEW 4, 481).”로 적고 있다. 또한 엔겔스는 『반뒤링론』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우선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로서 스스로를 폐지시키고, 따라서 계급적 차별과 계급적 차이를 폐지시킨다. 그리고 국가로서의 국가도 폐지시킨다(MEW 20, 361).”

3.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국가소멸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간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변화되는 혁명적 변화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정치적 과도기로 언급되고, 그와 같은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와 다를 수 없다(MEGA 25, 22).” 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공산당선언』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를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나의 계급에 의한 독재로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이 가지고 있는 비민주적 특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폐지되고 특권계급이 사라지는 사회에서 사실 특정계급에 의한 지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민주적 특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제(Marcuse [1958]2000, 41)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은 일정정도 ‘대의제’ 형태를 함의하고 있다

고 해석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가 ‘하나의 계급’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능의 분담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마르크스는 ‘직접 생산자’를 대표로 임명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의제를 생각했다는 주장이다.

국가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MEW 20, 263). 사실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국가의 소멸은 당연한 귀결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의 도구이므로, 더 이상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의 소멸은 높은 수준의 생산 발전을 전제로 한다. 엥겔스의 『반뒤링론』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사회계급의 폐지(*Abschaffung*)는 단지 이러저러한 특정 지배계급의 존재가 아니라 주로 하나의 지배계급의 존재를, 또한 계급차별의 존재를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낡은 것이 되는 사회적 발전 수준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것(역자 : 사회계급의 폐지)은 어떠한 하나의 지배계급에 의한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수취와 그에 따르는 교육과 정신적 지도의 독점을 통한 정치적 지배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지적으로 발전에 방해가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생산 발전을 전제로 한다(MEW 20, 263).”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과도기에 국가를 가정하는 새로운 정치형태를 1871년 파리코뮌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코뮌의 상황(*Kommunalverfassung*)과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Staatsmacht*)’(부르주아 정부형태(*Bourgeoisregierungsform*)) 붕괴의 필연성을 강조한다(MEW 17,336; Hennicke 1973, 81~82 재인용). 다른 한편 “마르크스는 코뮌만이 사회혁명의 정치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스스로 노동계급의 사회운동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행위의 조직된 수단이 될 수 있다. 코뮌은 노동계급이 계급과 그에 따르는 모든 [계급지배]의 폐지에 도달하는 것을 통해서 계급투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중략)....하지만 그것은 이러한 투쟁이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상이한 단계를 관통하는 합리적 중간단계(*Zwischenstadium*)을 형성한다(MEW 17, 546; Hennike 1973, 82 재인용)”.

III. 북한의 노동계급 이론상의 노동계급의 위상과 정체성

□주체의 계급리론□(김천식 2001, 8~10)은 아래와 같은 김일성의 계급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서 김일성의 계급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개념과 다르지 않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계급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김일성 저작집 40□ 218).”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 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을 쥐었는가 못쥐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국가주권은 정치적 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김일성 저작집 32□ 527).”

북한의 계급개념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국가주권의 소유를 기초로 하는 계급개념이다. 국가주권이 생산수단의 소유보다 더 큰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권력과 소유는 일치한다. 물론 이와 같이 국가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성취된 국가에서 노동계급이 곧 지배계급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적 과정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곧 북한사회에서 당의 지배는 프롤레타리아의 지배와 동일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은 당의 영도에 따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지도하는 사회의 영도계급이 된다. □철학사전□(1971, 192)은 북한사회에서 “노동계급은 김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당 및 국가건설에서 령도계급, 핵심부대로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보다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시기에 당의 역할은 노동계급을 조직화하고 ‘사상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여기서 직업동맹의 사상교양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직업동맹은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직업동맹의 기관지인 □로동자 신문□(□로동자(1948)□)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이외에도 노동계급의 사상의식 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 직업동맹, 민청 단체 등에 의한 정치사상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이 강조되었다(김천식 2001, 109). 노동계급에 대한 당의 지도과정에서 직업동맹은 인전대(transmission-belt)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렇지만 노동계급과 수령·당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보면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라는 정의가 무색해진다. 노동계급은 다른 계급과 구성원들에게 ‘령도적’ 역할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수령과 당의 ‘지도’ 아래에 있다. ‘주체의 계급이론’은 노동계급의 관점이 ‘과학적인 관점’이라고 추켜세우지만(김천식 2001, 83), 혁명사상(마르크스-레닌주의 혹은 주체사상)의 원리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수령’이다. 수령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 존재이며, 수령의 뜻에 따라 당이 조직되고 노동계급이 지도 된다.

김일성의 □로작용어사전□(1982)은 노동계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다...(중략)...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은 착취사회의 노동계급과는 달리 국가주권과 생산수단, 과학, 기술, 문화 등 사회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며 농민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성원들을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이끌어나간다. 노동계급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역사적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또 김일성은 당의 성격과 위상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당은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이 진행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합니다. 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령도하는 여기에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김일성[1986]1994, 21).”

김정일은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원리에 기초하여 노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 원칙을 새롭게 밝히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은 최고뇌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당이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당의 존재와 발전을 위한 근본요구이며 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승하여 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김정일 1995, 88).”

노동계급을 비롯한 대중은 수령과 당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대중은 수령과 당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노동계급은 수령과 당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인식하는 모순을 보인다. 적어도 수령과 당의 관계에서는 이론적인 논의에서조차 노동계급의 자율성은 확인하기 힘들다. 사실 노동계급은 혁명의 영도계급이 아니라 수령과 당의 영도에 복종하고 실행하는 계급이다.

북한사회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이후 이론적으로 노동계급은 경제의 주체가 된다. 노동계급이 경제의 주체라는 점은 노동계급이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경제 관리의 주체라는 점을 말한다(박영근외 1992, 9). 노동계급이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직접 경제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선전된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자대중 중심의 관리’를 강조하지만, 그 논리에는 당의 지도가 전제되어 있다.¹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과 기업소 단위의 생산조직 혁신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공장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을 관리·운영한다. 공장당위원회에는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공장 관리에 참가하고 있다. 생산에 대해서 모든 당원과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책임을 진다. 당위원회는 중요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공장을 관리·운영한다. 당위원회는 35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당간부, 행정간부, 핵심적인 노동자와 기술자가 참여하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노동자와 기술자가 공장관리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노동자는 생산과 관리의 주체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체계는 노동계급의 관리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일부를 관리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관리에 참여하는 이른바 ‘핵심적 노동계급’을 과연 노동계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설령 노동계급으로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노동계급의 참여가 곧 노동계급의 참여와 동일시되기는 어렵다. 또한 당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급의 실질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혹여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동원과 감시를 위한 방식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현재로서는 구하기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계급이 당위원회에 참여하

¹ 해방이후 도입된 유일관리제에서도 이른바 ‘당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배인과 중앙과의 계획을 둘러싼 마찰이 존재했으며, 권력은 이에 1956년 이후 현지지도를, 60년 이후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당의 지배를 강화하고 중하층 관료들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게 된 이유는 생산성 진작을 위해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노동계급은 경제 관리의 주체라기보다는 여전히 생산의 주체일 뿐이다.

현존 사회주의 사회의 현실에서 노동계급은 대자적 계급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당이 노동계급의 ‘초자아(super-ego)’가 되어 노동계급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었다(Marx [1955]1999; Kubat 1961, 6). 한마디로 과도기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적·사회경제적 자율성이 취약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은 노동계급의 의사를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러시아 혁명 이후 당내 민주주의는 취약했으며 노동계급은 새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Liebman 2007, 347; 352~383). 둘째, 노동계급은 직접 생산자로서 계획에 참여했을 뿐,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배제됨으로써 사회경제적 자율성이 취약했다. 노동계급은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해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관료와 노동 간의 비호관계가 형성된다. 셋째, 노동계급은 자신의 지위와 현실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수준을 가지지 못했다. 오히려 당은 ‘왜곡된 마르크스주의(distorted Marxism)’를 통해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의식수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했다(Bahro 1977, 197). 노동계급은 현실을 합리화하는 교육, 제한된 정보, 이데올로기적 왜곡 덕분에 자신의 위치와 현실의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넷째, 노동계급이 원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1)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과 감시 (2) 노동조직의 국가화 (3) ‘사회주의적 경쟁’ 때문이다(박형중 2002, 165; Bahro 1977, 199; Fitzer 1986, 96~102; Ticktin 1973, 24~26). 또 노동계급의 원자화는 곧 탈정치화로 귀결된다. 마르크스(Marx [1955]1999)와 레닌(Lenin 1988, 89~90)은 모두 노동계급이 경제투쟁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대자적 계급’으로 계급의식 발전의 척도로 이해했다. 하지만 정작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계급은 정치세력화하지 못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계급을 당에 의해서 조정되고 관리되는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노동계급이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억압과 감시로부터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당과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 이후 노동조직의 성격 역시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김일성([1971]1984, 529)은 대안의 사업체계 이후에는 직업동맹이 공장, 기업소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감독·통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장당위원회가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직업동맹이 기업관리에 대하여 감독통제한다면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조직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노동계급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부대이며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조직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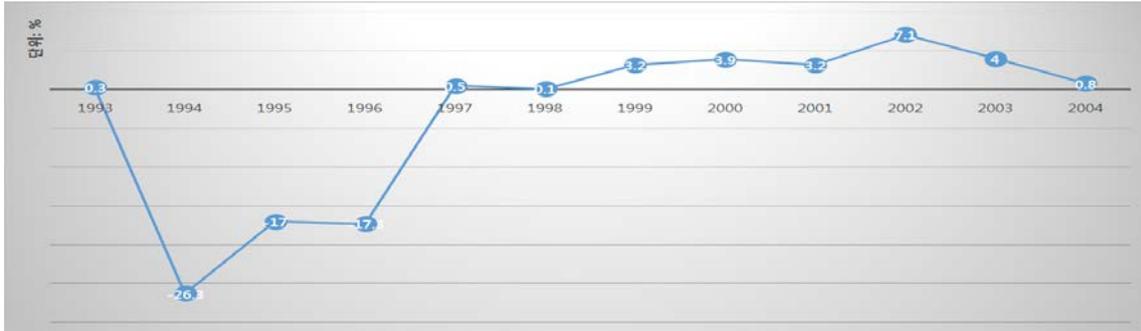
다. 직업동맹을 비롯한 모든 대중단체들은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적극투쟁해야 합니다. 공장당위원회가 공장의 기업관리 운영을 직접 지도통제하고 있는 조건에서 직업동맹이 기업관리에 대하여 감독한다면 그것은 결국 직업동맹이 당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으로 직업동맹을 당우에 올려놓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직업동맹이 공장측과 단체계약을 맺는 제도와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권한을 취소시켰습니다(김일성 [1971]1984, 529).”

대신 김일성은 직업동맹이 당의 ‘인전대’로서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로동계급’을 조직 동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김일성 [1971]1984, 531). 이는 당의 지도와 방침을 노동계급에게 선전·교육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동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노동조직의 정치적 자율성은 물론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 역시 완전히 무시된다. 곧 직업동맹은 당의 ‘외곽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조직이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의 역할을 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국가기구화 됨으로써 노동계급의 원자화는 더욱 더 심화된다. 노동계급의 원자화는 결국 노동계급의 탈정치화로 귀결되고 만다.

Ⅲ. 시장화와 노동계급 정체성의 변화

북한경제는 199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경제위기는 그 이전의 경제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촉발했다. 북한정부는 90년 경제난과 식량난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북한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경제위기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했지만, 위기이후에도 북한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북한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북한경제성장률은 1994년 -26.3%, 95년 -17%, 96년 -17.3%였다. 경제위기 이후에도 빈곤과 기아가 일상화되었다. 생활비(임금) 지급과 배급제가 중단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공장가동률은 20~30% 정도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98년 이후에도 전력난과 원자재 부족 등으로 크게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스탈린주의적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이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1990년대 북한경제의 위기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위기’였다.

그림 2. 북한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1993~20004)



출처: 북한정부공식통계; 문성민,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2014), 15쪽에서 재인용

북한의 시장화(Marketization)는 경제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시장개혁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북한 전 지역에는 약 400개 정도의 장마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이러한 수치는 2010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장화는 처음에는 소비재 시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생산재 시장은 물론 자본·금융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양문수 2010). 북한정부는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를 통해서 시장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듯이 보였지만, 2005년 말 다시 보수노선으로 회귀했다. 2009년 11월에는 다섯 번째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복원되기 어려웠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만 확산시켰을 뿐이다. 시장이 없는 북한경제는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계획과 명령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국가는 단속과 처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경제는 한편으로는 계획과 명령은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단속하고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다.

계획과 명령의 실제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비출근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비출근집단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자들 가운데 일정한 금액을 공장에 납부하고 실제로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8.3 노동자’들이다. 8.3 노동자의 어원은 ‘8.3 인민소비품 운동’이다.

²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2015년 5월 20일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 전역에 장마당 396,”라는 제목의 기사를 타전한 바 있다. 2015년 5월 24일 검색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704c131c0acc9c4-d558b298c5d0c11c-bcf8-bd81d55c/satellite-05202015154923.html)

‘8.3 인민소비품 운동’은 지방공업 등에서 원자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남은 ‘자투리’ 원자재로 생산물을 소비재로 만들어 쓰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 말이 변질되어 8.3 노동자는 자신이 배치 받은 공장, 기업소, 농장 등에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고, 장마당에서 시장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8.3 노동자는 ‘분조’나 ‘작업반’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시장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³ 8.3 노동자는 공장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이다. 둘째, 무직자이다. 북한사회에서는 ‘부양’으로 분류되는 주부,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장과 기업소의 허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북한에서 무직자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다. 무직자는 단속에 적발되면 대부분 ‘노동 단련대’에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유민들이다. 북한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속한 공장에 출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주거지를 벗어나 불특정한 장소를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지역의 빈집 등에서 살아가며 주변의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넷째, 사적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사적 노동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은 개인집에 고용되어 다양한 집안일을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가사노동이나 물배달을 하거나 미장 및 집수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박영자 2009, 149~171). 탈북자 B씨(함경북도 28세)는 집에서 ‘머슴’으로 2명 정도를 고용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삿바리’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집에 공사를 할 일이 있을 때도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킨다고 했다. 또한 이 유형에는 모내기나 추수철 등 노동동원 시기에, 일부 주민들이 ‘사람을 사서’ 자기 대신 동원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⁴ 두 번째 구체적 유형에는 신홍 부유계층인 소위 ‘돈주’들이 국가로부터 워크(수출입 허가권)을 사들여 만든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이다. 사적분야에 고용된 노동은 부분적으로 합법적이고, 부분적으로는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다. 마지막 유형은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³ 탈북자 C씨(신의주, 32세)는 5~6명 단위의 ‘8.3 분조’로 일을 하다고 탈북했다고 한다. 공장에는 월 300달러를 납입하고, 자신들은 장사를 했다고 한다.

⁴ 탈북자 B씨에 따르면 자신의 살던 지역에서는 동원을 대신 나갈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5,000원(북한 원화) 정도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집을 나르기 위해서 ‘짐꾼’을 쓰거나, 물건을 가까운 거리는 ‘리어카’, 먼 거리는 ‘씨비차’를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거리, 무게, 시간 등을 고려해서 돈을 지불받는다. 이들 가운데 짐꾼들은 고용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리어카’와 ‘씨비차’는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 즉 리어카, 차 등- 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지배권력은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노동관리 만큼은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배치 받는다. 직장에 배치 받은 노동자들은 공장과 기업소가 속한 지방정부에 있는 ‘로동과’에 신고를 하고 어느 공장에 배치 받았다는 증명서, 즉 ‘배치장’을 받는다. 노동자는 이 배치장을 공장의 로동과에 제출하면, 공장의 로동과는 노동자에게 ‘확인서’를 준다. 그러면 노동자는 공장에서 받은 확인서를 지방정부의 로동과에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고용절차는 끝이 난다. 이렇게 수속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속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정지 증명서’이다. 식량정지 증명서에는 그동안 그 노동자가 어디를 거쳐 이 공장에까지 배치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알 수 있다. 식량정지 증명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발급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력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탈북자 B: 함경북도(28세)). 그런데 ‘돈주’들이 와크를 구매해서 설립한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탈북자 B: 함경북도(28세)). 돈주들이 세운 회사에서 나온 이익은 권력기관에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거나 관료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남은 이익은 기본적으로 모두 돈주의 몫이다. 그렇지만 고용절차 만큼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계획경제 시스템 아래에 운영되는 공장이나 돈주들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돈주의 자율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 돈주의 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지만 돈주의 개인적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고용절차는 계획경제 시스템과 동일하게 ‘로동과’에 신고를 하고 배치서를 받아서, 회사의 고용과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로동과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이때 마찬가지로 ‘식량정지 증명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즉 채용의 결정은 일정정도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기본적인 노동관리는 국가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장화 이후 국가의 노동관리는 전과 같지 못하다. 사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탈북자에 따르면, 사적 분야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공장과 기업소에 출근해도 생활비와 배급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개인집에서 다양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일이라도 맡으려고 하지만, 이 역시 하려는 사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⁵ ‘머슴’이라 불리는 이들은 단속되면 역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공여하면 눈을 감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탈북자 A: 함북 회령/2014년 탈북/장사(25세)). 그러나 이는 상황이 바뀌면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장화는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노동계급에게 노동력을 판매할 자유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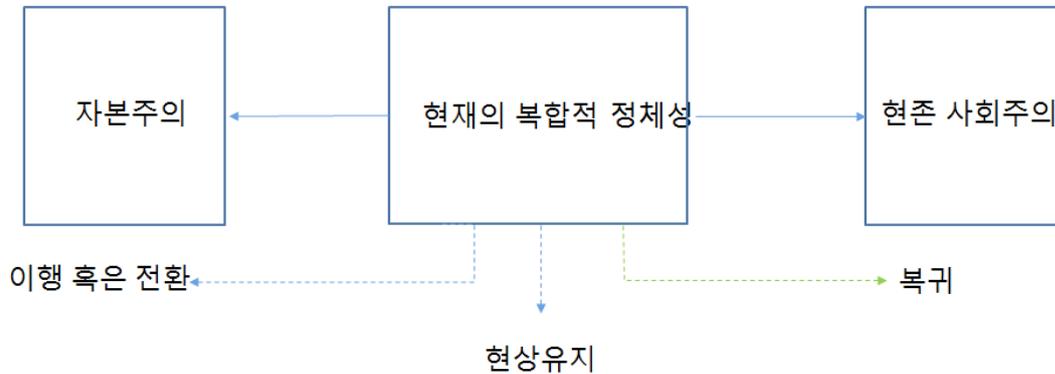
현존 사회주의의 법률, 규범, 가치체계, 전통 등에서 계급의식의 변화가 지체되고 왜곡되어, 과거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자신이 고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것이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단속에 걸리면 ‘뇌물을 고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면서 과거와 같은 복종, 충성, 동원으로 대표되는 위로부터 노동계급에게 강요된 정체성은 약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자본주의적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돈주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이윤은 돈주의 몫이지만, 노동만큼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사적 분야에 고용된 노동자들마저도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으로 고용된 것이기에 공통된 이해관계와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단속과 처벌은 노동계급이 변화된 시대에 어울리는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국가의 강력한 통제는 노동계급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정부는 여전히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당과 국가는 실제로 노동계급에게 사회주의 노동계급으로서의 강요된 정체성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권력의 의지일 뿐 현실이 아니다. 물론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으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정치경제적 조건이 미약하다. 또한 노동계급의 의식 역시 당과 국가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왜곡에 의해서 그리고 강력한 법률과 처벌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노동자들이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려고 시도하거나 혹은 팔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현재 북한 노동계급의 정체성은 현존 사회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도

⁵ 탈북자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회령지역의 경우에는 ‘머슴’이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을 살 만큼 여유가 있는 집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북한 노동계급의 정체성은 ‘복합적(hybrid)’인 성격을 띠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북한노동계급의 정체성



IV. 결론을 대신해서

주체사상에서 노동계급은 북한체제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급이다. 노동계급은 북한체제가 ‘사회주의’라는 점을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은 혁명과 정치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경제관리의 주체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현실에서 노동계급은 수령과 당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는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노동계급이 이른바 ‘당성(Parteikheit)’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제시한 생산목표를 성취하는 것뿐이다. 지배권력은 충성심이 높은 노동자가 생산력도 높다고 현혹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검증될 수 없다.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이 명제는 노동계급의 동원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북한체제에서 노동의 형태는 사용가치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노동이며, 사회화의 형태는 계획을 매개로 하는 구체적(직접적) 사회화이다. 구체적 노동과 구체적 사회화는 그 자체로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오히려 이는 노동계급이 현존 사회주의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피동적인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북한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형성과정에서 표출된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북한체제가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정당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그런데 노동계급이 수령과 당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북한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지배권력은 이러한 체제정당성의 한계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은폐하고 스탈린주의적 언술체계를 통해서 합리화한다. 계획경제 체제는 일상적으로 노동을 동원하고 통제·관리하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인 제도가 된다. 배급제는 노동계급에 대한 국가(정치) 의존도를 높였으며, 사회주의적 경쟁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채근하면서 동시에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수단들은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의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강력한 물리력은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물리력은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은 원자화되었다. 당연히 계급적 연대를 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체제에서 노동계급의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북한정부는 여전히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당과 국가는 실제로 노동계급에게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동원과 착취의 대상이며 수령과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받고 있다. 현재도 노동계급은 정치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물론 노동계급은 과거와 같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다.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배급제는 중단되었다. 북한체제가 노동계급의 생활세계를 식민화했던 다양한 수단들 가운데 일부를 심각한 경제난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시장화(marketization)가 확산되면서 북한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계급을 체제 내부로 통합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유효한 체제 정당화와 통합의 수단들이 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이며 다른 하나는 억압적인 기제들이다.

현재 북한체제에서도 ‘사회주의’란 이데올로기는 노동계급의 의식에서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시장화 과정에서 변화된 노동자들의 삶의 양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노동계급은 이러한 변화가 이 체제에 적절한 것인지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 노동계급에게 강요되고 있는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비(임금)와 배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공장에 출근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지 않다. 일부가 개별적으로 단속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가 노동계급의 자기검열과 사회의 중요한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지배권력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기제를 이용하여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지배권력이 인민

들의 삶의 곤궁함을 이용하여 인민들을 정치사회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주체로 설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정체성 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노동계급의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면 북한체제의 정당화 방식과 체제 통합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체제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이 일정정도 유지될 수 있다면 북한의 지배권력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세계에 대한 체제통합 방식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얼마전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도 새로운 최고지도자 김정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다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장화의 확산으로 북한체제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에게 여전히 강요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지금의 북한 노동계급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여부가 북한체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노동계급은 경제위기 이후 시장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현존 사회주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비록 북한체제에서 노동계급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노동계급의 정체성 변화가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명운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계급이다. 독재체제에서도 정당성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체제에서도 정당성은 ‘아래’로부터 나온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북한 문헌

김일성. [1971]1984. “사회주의 사회에서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6□.

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일성, [1986]1994,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 저작집 40』, 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정일, [1995]2000,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김정일 선집14』, 평

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천식. 2001. 『주체의 계급리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박영근 외, 1992,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71, 『철학사전』, 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한국 문헌

문성민. 2014.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박형중. 2002.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양문수. 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정운영, 1993, 『노동가치이론 연구』, 서울 : 까치.

해외문헌(번역본 포함)

Bahro, Rudolf. 1977. *Die Alternative*. 1978.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Manchester : New Left Review Press.

Engels, Friedrich. 1986. *Marx Engels Werke 20* Berlin : Dietz Verlag.

Hennike, Peter. 1973. “Probleme einer Kategorialen Bestimmung der Übergangsgesellschaft“. in *Probleme des Sozialismus und der Übergangs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 Surhrkamp.

Filtzer, Donald. 1986.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London: Pluto Press.

Kubat, Daniel. 1961. “Soviet theory of classes“. *Social Forces*. vol. 40. no.1

Lenin, V. I. *What is to be done?* 김민호 역. 1988.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백두.

Liebman, Marcel. 2007. 정민규 역. □레닌의 혁명적 사회주의□. 서울: 풀무질.

Marcuse, Herbert. *Soviet Marxism: Critical Analysis*. 문헌병 역. 2000.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분석□. 서울: 동녘

Marx, Karl. [1875]1985.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in *Marx Engels Gesamtausgabe 25*. Berlin : Dietz Verlag.

Marx, Karl. [1955]1999. *The Poverty of Philosophy*. Moskow : Progress Publishers. 1999. Marx/Engels

Internet Archive html ed.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7/poverty-philosophy/ch02e.htm>

Meek, Ronald. 1956. *Studies in the Labor Theory of Value*.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Sweezy, Paul. 1956.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Ticktin, Hillel. 1973.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the USSR." *Critique*. vol.1. no.1.